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1994. 12

黃炳憲 (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후

후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촉진시키고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제 형성 도모에 요구되는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을 모색하였다. 단순히 자본주의체제 또는 추상적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분석을 토대로 자본주의체제의 구체적 구현형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체제에 배태되어 있는 이념체계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권위주의, 자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자유주의·전체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자유주의·평등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은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종래의 체제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국가의 이념적 좌표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은 남북한의 이념 및 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체제 형성의 도모에 요구되는 통일한국의 체제이념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이념체계는 통일후 체제형태를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체제의 발전·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 자본주의체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제3체제의 형성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통일 한국의 정치이념은 제3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상호 수렴되는 제3의 길은 체제전환이나 체제통합의 한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 구조를 지닌 체제로서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과연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또한 체제간의 갈등이 제3체제의 형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본주의체제 또는 추상적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분석을 토대로 자본주의체제의 구체적 구현형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는 연구방법론을 택한다.

남북통일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은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 현 시대는 국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사회·경제적 공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민족국가의 형성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대외적 성격으로는 상호의존성과 지역통합

및 국제화의 추세에 비추어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국제협력 및 세계평화와의 보완관계에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체제이념적 성격은 민족성원의 자유, 평등 및 복지가 결합되고 인간의 존엄성의 구현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긴장·대립관계에 있는데, 이는 자유가 부여된 개인간의 경쟁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일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주의적 평등은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없는 평등, 또는 노예의 평등으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체제에서는 이념은 자유와 평등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자유가 규제받지 않는 무제한적 의미의 개인적 자유를 뜻한다면, 이 자유로 인한 불평등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자유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평등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즉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평등이 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의미한다.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비)물질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성원들의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조건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이며, 충분조건은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 확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없

다면 사회성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은 절대적으로 향상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 배제된 분배구조는 전체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신 특정계층의 이익에 종사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가 통일한국을 구성하는 요체가 된다.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가치가 구현된 체제이념으로 통일한국은 정치적 민주주의로서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아울러 법치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자유, 평등 및 복지 등의 이념을 국가의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구현시키는 구조적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제도가 법치주의의 제도적 내용이 된다.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빈곤 등을 제거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적 민주주의도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보수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는 바, 이는 신자유주의가 단지 경제성장만 집착하여 사회통합의 여건 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형태는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개입이 아니라 사회성원간의 자율적 조정 에 의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이념형태는 국가에 의해 주

도되는 「국가중심적 개혁주의」가 아니라 사회성원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기능하는 「사회중심적 개혁주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중심적 개혁주의」에는 관료주의적 폐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중심적 개혁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를 통한 시민적 참여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의와 참여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여적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극대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합형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바, 이 가운데 결사체 모형으로서 조합주의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결합시키는 통일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이념체계로서 제시된다. 시장모형이 개인이 최대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모형이라면, 결사체 모형은 시장적 경쟁을 축으로 하면서도 시장관계를 대립관계가 아닌 자발적 협력관계로 대치함으로써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전체를 축으로 하는 국가주의와의 대립관계를 상호의존관계로 만드는 조직원리이다. 결사체 모형은 자발적 협조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로서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간의 모순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념체계이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조국의 체제이념인 자유, 평등, 복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체제 형태를 갖출 때 남한체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체제의 절대우위를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합의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조합주의는 이익을 분배하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손해를 흡수·배분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일후의 체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조합주의적 원리의 적용에 의해 사회통합이 제고될 경우 통일한국은 통합과정상의 문제점을 국가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주주의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6
II. 南北韓의 政治理念	10
1. 南韓의 政治理念	10
가. 理念的 指向性	10
나. 政治理念과 현실과의 괴리	15
2. 北韓의 政治理念	25
가. 주체사상	25
나. 階級獨裁와 社會主義의 民主主義	34
III. 統一韓國의 理念的 基本價値	43
1. 統一의 基本理念으로서 民族主義	43
2. 體制理念的 基本價値	52
가. 自由	53
나. 平等	62
다. 福祉	68
IV. 統一韓國의 體制理念	78
1. 體制理念的 對內的 性格: 자유민주주의	78
가.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合一체로서 自由民主主義	78

나. 自由民主主義의 양대논리	94
다. 自由民主主義의 실천기제	126
2. 體制理念의 대외적 성격: 열린 민족주의	157
가. 民族主義와 국제주의와의 관계	157
나. 열린 민족주의	166
V. 結 論	177
參考文獻	185

第 I 章 序 論

1. 研究目的

한민족은 구한말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에 실패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다음,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남북분단에 봉착한 채 여전히 민족문제를 풀지 못하고 분단국가를 이루고 있다. 남북한체제에 배태되어 있는 理念體系¹⁾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권위주의, 자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자유주의·전체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자유주의·평등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은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종래의 체제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民族國家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국가의 이념적 좌표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북한이 지향해 왔던 사회주의는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이

1) 이념(Ideologie)이란 사념(Idee)의 논리(Logik)적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실재(Realität)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치이념이란 램베르크(Eugen Lemberg)의 개념에 따라 현존사회나 미래 사회를 위해 선호하는 정치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그러한 정치질서를 획득하기 위해 전략을 제공하는 신념체계로 정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이념을 단순히 사회·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상 또는 허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약된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론적 가정의 조합으로 파악하여 현실적 적실성을 검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념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Eugen Lemberg, *Ideologie und Gesellschaft* (Stuttgart, 1974) 참조.

입증하듯이 발전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또한 남한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사회 구현을 體制理念으로 상정하였으나, 선진국가들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탈피하고 복지국가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구상에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위한 체제모색에 있어서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기존 선진국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體制理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統一韓國의 이념적 좌표는 한반도 통일방식 및 통일정책과 유리되어 설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향하는 이념체계가 확립되고 이것의 구현을 적극 추진한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체제의 절대우위를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은 촉진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이 논리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체제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제3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合意統一을 달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후 체제형태가 자본주의체제로 귀결되는 흡수통일방식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검토·분석해보면, 남북통일방식으로는 「합의에 의한 점진적 흡수통일」이 최선의 통일방안으로 귀결된다.²⁾

「합의에 의한 점진적 흡수통일」의 추진을 위해 한국은 북

2)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2」 (서울: 한울, 1994), pp. 277~322.

한에 대한 체제의 절대우위 확보에 요구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제측면에서의 體制改革 수행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 통일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에서 보다 명백하게 나타난다. 서독의 자본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社會的 市場經濟制度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로 분류된다. 서독의 정치체제는 자유, 인권, 정의 등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질서가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위에서 정치·사회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반면, 동독의 정치체제에서는 동독의 지배층이 당에 의한 관료주의적 권력독점을 고수하여 사회발전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는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측면의 체제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우열관계는 동독주민의 정체성을 서독사회 지향적으로 형성시킴으로써 독일통일의 외적 요인이 변화될 경우 統一過程을 서독에 유리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명제로는 정치·경제·사회체제의 발전격차가 통일촉진의 內的 要因이며 통일사회의 기본구조와 형태를 규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분단국 정치·경제·사회체제의 발전격차가 크면 클수록, 열위체제하의 주민 정체성은 우위체제 지향적으로 형성되어 통일이 촉진되

는 한편, 체제통합은 우월한 체제로 수렴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民主的 政治文化의 형성이 필요함은 물론, 민주적 법치국가를 구축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경제성장을 보다 더 진척시켜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층에 고르게 분배하기 위하여 社會保障制度를 확충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수립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동서화해의 증대, 공산권의 개방과 개혁, 세계의 경제블럭화 추세, 아시아·태평양시대 등장 등의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外的 統一環境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대내외적 요인이 충족될 경우, 남북통일은 촉진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사회가 민주적 사회형태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 통일기반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이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은 한민족의 미래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體制形態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이념 및 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체제형성의 도모에 요구되는 통일한국의 체제이념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統一韓國의 체제이념을 연구·모색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모색은 한

민족의 미래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형태를 연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分斷過程에서 교류·협력이 거의 없었던 남북한의 경우 이질화의 심화는 물론 경제적 발전격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통일후의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경우 명목상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후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統一政策일 것이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체제통합방법으로는 독일식의 급격한 흡수통합보다는 북한체제를 시장경제 및 다원주의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체제를 통합하는 漸進的 統合方案을 들 수 있다. 북한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기가 폭발하여 북한 상황이 급속하게 변할지라도 남북한은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면서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漸進的 統一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³⁾ 통일후유증을

3) 우리 정부가 점진적 통일을 추구할지라도 북한에서 체제붕괴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점진적 통일정책은 급진적 통일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은 점진적 통일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흡수할 수 있는 체제의 사회적 통합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점은 체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조직원리가 주요문제로 대두된다. 즉 統一韓國의 체제가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를 대체할 위험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민족은 통일로 인해 자유, 평등 및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권 및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한 통일후 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體制理念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그 동안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하에서 문화적 동질성만을 부분적으로 유지한 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족의 정체성은 다르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체계는 民族主義를 기반으로 전체주의적 계급가치와 형식주의적 개인가치를 발전적으로 통합·극복하는 이념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양체제의 대립·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념은 어느 발전된 체제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西歐型

福祉國家도 최근 발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는 동서 양진영이 지니고 있는 이념체계의 단순 모방에서 찾지 말고, 동서 양진영 체제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이념체계는 통일후 체제형태를 資本主義體制를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체제의 발전·실현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선 자본주의체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제3체제의 형성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통일한국의 政治理念은 제3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체제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상호 수렴되는 제3의 길은 체제전환이나 체제통합의 한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 구조를 지닌 體制로서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과연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또한 체제간의 갈등이 제3체제의 형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의 이념체계를 단순히 수렴론적 입장에서 양 체제의 장점만을 취사선택하는 하나의 평균적 결합형태에서 찾지 않는다. 收斂論的 立場에 입각, 합의에 의한 이념통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양 체제가 지니고 있는 이념적 갈등이 수렴론적 절충주의의 추상적 관념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절충·통합된 이념체계가 구체적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없고 단지 이데올로기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본주의체제 또는 추상적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분석을 토대로 한 資本主義體制의 구체적 구현 형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는 연구방법론을 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발전양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통일국가의 理念體系를 모색한다. 통일한국의 기본가치와 체제이념을 선정하는 경우 논리전개를 위한 방법론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를 채택·분석한 다음 이를 구현할 체제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추상에서 구체로 분석 수준을 높이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第Ⅱ章에서 남북한 정치이념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第Ⅲ章에서는 통일한국의 이념적 기본가치로서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개념을 설정·분석하였다. 그리고 第Ⅳ章에서는 이들 개념들의 상호관계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및 결합관계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추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양대이론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기본논리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의 對內的 性格으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를 통한 참여적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 신조합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

한국의 체제이념의 대외적 성격으로는 국제협력을 축으로 하면서 민족주권을 제고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제시하였다.

第 II 章 南北韓의 政治理念

1. 南韓의 政治理念

가. 理念的 指向性

남한에서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국가적 질서를 지배하는 대한민국 헌법, 특히 헌법전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自由民主主義로 규정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국가권력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탄생되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특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자유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의 창설과 아울러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착될 수 있는 統治形態이다.⁴⁾ 이 경우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된다.

4) 서독연방헌법법원의 판결에 따를 경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정의된다. BVerfGE 2, S. 1,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 1988), p. 110에서 재인용.

자유민주주의는 主權論⁵⁾에 입각하고 있는 바, 주권사상은 국가주권론과 국민주권론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국가주권은 국가를 국가권력의 주체로 당연시하기 때문에 국가를 전능한 위치에 놓는다. 이러한 國民主權論은 루소(J. J. Rousseau)에 의해 완성되었는 바, 개인적 절대주권에 반대하면서 절대주권은 오로지 전체로서의 인민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⁶⁾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2항의 규정과 같이 국가주권에 입각하지 않고 國民主權論의 理念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또한 주권은 통치권과 구별되는 바, 주권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 즉 헌법제정 권력을 의미하고 통치권은 구체적인 국가목적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國家權力(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주권이 위임한 권력의 총괄적 지칭이다.⁷⁾

현대적 의미에서 국민주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으로서 직접

5) 주권이란 주어진 영토내에서 규칙, 규제 및 정책의 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통치해나가는 공동체 내의 권위를 의미한다. 주권은 국가의 자율성, 즉 국내적 국제적 정책목표를 형성·추구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국가의 실제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6) 국민의 개념은 전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견해와 유권자의 전체를 의미하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영, 「한국헌법론」(서울: 박영사, 1990), p. 136 참조.

7) 권영성, 「헌법학원론」, p. 103.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의 샘으로서 헌법 제정권자로 기능하고, 선거권을 통해서 헌법상의 여러 국가권력을 창조하고, 그 권능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輿論’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작용의 민주적인 조종사로서 기능하는 데 있다.”⁸⁾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는 代議制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투표 등에 의한 직접민주제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헌법상의 국민투표제도, 대의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창설된 국가권력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法治主義 原理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국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⁹⁾ 내지 법률만능주의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 평등 및 복지를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合法性을 기본으로 하는

8) 허영, 「한국헌법론」, pp. 138~139.

9) 형식적 법치주의란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하여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로 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합법주의를 의미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체제하에서 법률을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이 경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를 의미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 p. 119 참조.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법치주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법(jus)을 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lex)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인간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정의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¹⁰⁾

法治主義는 자유, 평등 및 복지 등의 이념을 국가의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구현시키는 구조적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제도가 법치주의의 제도적 내용이 된다.¹¹⁾ 기본권 보장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의 참여를 뜻하며, 권력분립이란 권력집중에서 올 수 있는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正義社會의 實現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헌법의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정의 실

10) 허영, 「한국헌법론」, p. 144.

11)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개진된다. 김철수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사법적 권리보장, 위헌법률심사제, 법치행정 원칙 등을, 허영의 경우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치행정 보장 등을 들고 있다. 김철수, 「헌법학신론」(서울: 박영사, 1984), p. 75; 허영, 「한국헌법론」, pp. 146~149.

현,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행복을 누릴 권리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규정하고 있을(헌법 제37조 2항) 뿐만 아니라 일련의 社會的 基本權의 폭 넓은 보장¹²⁾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경제질서도 정의사회의 이념에 맞도록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경제정의 실현과 經濟民主化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고 명시함으로써 修正資本主義 原理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¹³⁾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 원리

12) 우리 헌법상의 사회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1항),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의무(동조, 2/6항),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적 보호(동조 5항),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제32조 1항),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는 전향적인 노동입법(32조 및 33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들 수 있다. 허영은 사회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수용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과는 달리 사회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에도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사의 기본원리로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p. 152.

13)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전후 서독에서 채택된 경제질서로서 경쟁질서 확보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국가의 조정, 노사공동결정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통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참여와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

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고전적 자본주의 원리와는 달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이 불완전할 경우 국가의 정책적 조정을 채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우리 헌법에서는 경제정의가 무시되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수정자본주의 원리를 경제활동의 기본원리로 삼아 社會的 市場經濟秩序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 문화민족에 바탕을 둔 民族主義를 표방하고 있다. 즉 한민족의 통일·발전·독립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기본 국가이념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통문화국가의 건설을 위해 文化共同體의 문화민족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¹⁴⁾

나. 政治理念과 현실과의 괴리

한국이 지향하는 이념체계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

해서는 Otto Schlecht,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Tübingen: J. C. B. Mohr, 1990) 참조.

14) 허영, 「한국헌법론」, pp. 164~167 참조.

국가원리, 문화민족 이념 및 민족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적 실현수단이고, 법치국가가 자유와 평등의 국가기능적 실현수단이라면, 사회국가는 자유와 평등을 국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소위 사회구조의 골격을 의미한다. 또한 文化民族 理念은 우리 헌법이 우연히 형성된 사회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의해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발전될 문화공동체를 기본이념으로 삼으며, 민족주의는 완전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평화와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理念 指向性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현실간의 많은 괴리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이념체계가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체계와 유사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결합체로서 봉건국가가 인본주의 및 자유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市民階層에 의하여 타도당하고 근대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 국가와 사회의 상대적 분리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유·평등·박애의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면서 자본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정치적 세력으로서 시민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市民的 理念體系가 결여된 채 자유민주주의를 단지 체제이념으로 표방하는 국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남한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형성은 내재적으로 서구라파에서

처럼 자본주의를 물질 토대로 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계층의 정치·사회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이후 근대적 민족국가의 未來像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세력들간의 투쟁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성립된 외적 요인으로는 전후 헤게모니국가인 미국이 헤게모니 행사수단인 세계화폐, 군사력,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세계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에 적극 개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동서분쟁이 내재화되고 정치세력간의 투쟁이 외재화된 결과, 보수세력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물질 토대로 하는 自由民主主義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의 물질 토대는 허약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체계 역시 지배적 이념으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인 국가가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남한에서의 국가형성 과정은 시민사회에서 물질·비물질적 매개수단을 소지한 지배세력이 피지배세력에 대해 同意 및 妥協을 통하여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⁵⁾

더욱이 남한에서 형성된 근대국가는 사회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권위주의국가 형태를 지녔는 바, 이는 1950년대를 전후하여 실시되었던 토지개혁이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

15) Hwang Byung-Duck, *Nachholende Industrialisierung und autoritärer Staat. Das Beispiel Südkorea: Politik, Ideologie und weltmarktorientierter Kapitalismus.* (Berlin: Edition Sigma, 1989), pp. 191~203.

의 지배계층인 地主의 몰락을 초래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도전적인 전통적 지배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가계층은 자본축적과 노동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권력에 대한 고도의 의존과 유착이라는 취약성을 지녔기 때문에 동 시기에 발생한 기업가집단에 대해서도 국가는 國家主導型 産業化戰略에 의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는 유교의 문화적 관성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된다. 서구자본주의 발전과는 달리 한국자본주의 발전은 위로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비자본주의적 지배이념인 儒敎의 윤리체계는 다른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지 못했다. 동양 3국의 비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윤리체계인 유교윤리는 신분질서의 차이를 씨족사회 시대부터 존재하는 가부장적 가족형태가 확대된 외연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자연질서의 우주관으로부터 도출한다. 儒敎的 倫理는 자연질서에 상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군신간과 가족내에서도 상하와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¹⁶⁾ 유교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서구사회처럼 개인이 아니라 家族이며, 이 가족의 확대된 형태

16) 유교의 윤리체계에 대해서는 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Tübingen, 1920) 참조.

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부장 역할을 하는 국가권력은 일반 백성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해 절대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유교적 윤리에 의해 서구 사회와는 달리 국가와 사회의 상대적 분리가 없는 외형만 갖춘 權威主義的 形態로 존재했다. 따라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시되는 공적 기구로서의 국가영역과 자의적 국가개입이 방지되는 사회영역이 유교적 한국사회에서는 경계설정이 명확히 되기 어려우며, 유교적 윤리체계가 함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료국가의 우위로 인하여 사회는 국가에 종속·복속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의 경우처럼 국가의 자의적 개입이 없는 사회의 영역, 國家市民(Staatsbürger)으로서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계급 및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본축적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회 계급 및 계층간의 갈등을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주도하에 자본축적을 도모하였다. 즉 유교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국가권력에 대한 피지배세력 의식의 물화과정을 통하여 권위주의체제를 신비화시키면서 국가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消極的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반공이념은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억제하는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이념체계로서 기능하였다. 反共理念의 공

격적 성격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하여 반공이념은 계급적 이해를 뛰어 넘는 전쟁과 평화간의 대립구도를 설정, 국민 동의를 창출하여 국가의 강제력에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체계로서 굳혀졌다. 이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지배세력의 이념으로서 출발한 반공이념이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을 평화의 파괴자로 의인화시키는 非계급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배이념으로서 냉전반공주의 이념은 사회의 기득권층과 정치적 보수세력을 결합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소외된 민중계층으로부터 도덕적 동의를 통해 이념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도의 국가강권력에 의한 폭력적 지배에 의하여 관철되었기 때문에 반공이념은 성격상 부정적·억압적인 것으로서 반공분단국가의 正當性의 위기를 내장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⁷⁾

유럽, 특히 분단국가인 서독의 경우 내재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노동자계층을 체제내로 통합할 수 있었고, 외재적으로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토대로 현존 국가사회주의를 체제이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동독에 대한 체제경쟁에서도 절대

17)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서울: 한길사, 1993), p. 201; 박정권은 사회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와 같은 전통적 유교적 사회윤리 및 주체적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응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또는 관료적 능률과 규율을 강조하는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정치적 담론으로 내세웠다. 특히 6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등치시키면서 보·혁구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기까지 한 이념적 성향을 나타내 보였다.

우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상징물인 반공이념은 서독의 경우 支配理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동서분쟁의 최전선인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국가이념, 법치국가이념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격적 한반도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옹호하기 보다는 반공의 보루로서 한국의 정치·군사적 기능을 최우선시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自由民主主義的 秩序가 주도적 이념체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이념적 지향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이다.

1990년대 전까지 한국의 지배적 사회질서는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위계적 통제가 지배적인 조직원리인 국가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바, 국가주의의 지배적 이념체계는 유교 및 반공이념 이외에도 성장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成長 이데올로기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담지하고 있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논리하에 자유와 평등을 유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을 생산영역의 종속변수로 편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정치·사회적 조건으로서 정치·사회적 안정이 요구된다는 정치적 담론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논리체계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적 實現手段으로서 민주주의는 파행적 구조를 지닐 수 밖에 없었으며, 국

민의 기본권 보장을 축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는 크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원리는 추구될 수 없는 바, 이는 무엇보다도 생산자 집단이 자주적 노동조합이라는 수단을 통한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보다는 국가통제하의 배제적 組合主義 方式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¹⁸⁾ 현 정부하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성장 우선주의는 현 정부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우위에 대한 市民社會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권위주의가 허용하는 제한된 정치공간을 활용하여 정당을 조직하고 사회운동을 조직하였으나, 시민사회의 부활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완전하게 이룩하지 못하고 정권획득을 위한 정당간의 경쟁을 허용하는 政治的 民主主義라는 사회질서로 자리잡았다. 또한 산업화에 의한 시민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나타난 계층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기화된 사회세력들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면서 정치참여 요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하위체계,

18)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는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저지하여 노동자들을 원자화, 고립화, 개별화된 시장경쟁에 노정시킴으로써 정치·경제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억압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국가조합주의는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저지하고 시민사회를 원자화, 개별화, 고립화시킴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 동안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거나 권위주의적 억압적 통제하에서 脫정치화된 바 있었던 집단의 참여를 뜻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토대로 하는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회세력이 자신의 기능적·계층적 이익 및 지방적 이익을 국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제하에서 극도로 제한되었던 선거의 복원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政治的 自由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¹⁹⁾ 헌법 이념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 등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벤자민 바아버(Benjamin Barber)의 민주주의 분류방법²⁰⁾에 의하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은 권위주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民主化 이후에도 다원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화의 궁극적 목적

19) 임혁백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경쟁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시장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선거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민주주의는 선거시장에서 다수파인 승자는 소수파인 패자에게 미래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에 역전시킬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조건부적 동의를 얻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시장민주주의가 시장적 권력배분을 구현하고 있는 제도로 최고 득점자가 선출되는 대통령 선거방식, 1인 1구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방식, 다원주의적 기업별 노조의 채택 등을 들고 있다. 임혁백,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제,” 한국사회학회·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서울: 한울, 1992), pp. 98~100.

20) Benjamin Barber,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참조.

이 바아비가 제시하는 강한 민주주의 완성에 있다면 한국에서의 민주화 노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의 方式과 節次만을 강조하고 선거를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권행사는 선거권의 평등을 의미할 뿐,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할 경우 형식적 평등과 절차적 민주주의의에 집중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갈등을 시민사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의 물리적 개입을 초래하기 때문에 權威主義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조직의 자유가 평등하게 부여되더라도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경우 사회단체간의 경쟁 및 교섭은 공정할 수 없다. 예컨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의 구조적 힘은 단순히 자유로운 교섭과정의 존재만으로 계급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²¹⁾ 국가가 사회세력을 中央集中化시키고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관계가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을 이룸으로써 사회세력간의 자발적 협동을 통해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의 變化過程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

21) 정부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조직 원칙으로 기업별 노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3자 금지조항을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제한하였다. 더욱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기업집단 및 국가와의 타협의 길을 봉쇄하였다.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채 사회적 재생산을 국가의 강제기능에 의존한다면 국가권력은 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사회의 재생산과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權威主義的 國家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제사회집단이 그들의 이익과 요구를 표출·조직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계층, 성별, 기능, 지역 등의 不平等 構造로 인하여 특권적 사회집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표출·조직·실현하기 위한 참여와 행위가 부당하게 제한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2. 北韓의 政治理念

가. 주체사상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북한 특유의 「주체형 사회주의」의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²²⁾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서 북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政治理念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현시대를 마르크스와 레닌의 시대

22) 북한은 1961년의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강조하였고, 1980년 제6차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주체사상은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유일 지도사상으로 확립되었다.

와는 달리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와 자기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역사와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대”²³⁾인 주체시대로 규정하고 唯物論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북한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은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물론에 입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주의 認識論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체철학의 기초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사회적 존재」(gesellschaftliches Sein)가 「사회적 의식」(gesellschaftliches Bewußtsein)을 규정한다는 유물사관의 이론²⁴⁾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²⁵⁾는 논리로 전도시킨다. 즉 주체사상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동적인 집단의식을 극도로 강조함으로써 극단적인 주의론(voluntarism) 또는 唯我論(solipsism)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주체사상은 생산력을 강조하는 기술결정론적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는 동안 어떠한 생산관계도 변하지 않는다는 唯物史觀의 관점은 20세기 주체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

23) 북한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서울: 백산서당, 1989), p. 24.

24) K. Marx / F. Engels, *MEW* 13, p. 8.

25)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5.

는다고 주장한다. 낮은 생산력 수준으로 인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첨예되지 않았던 중국과 북한의 경우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다.²⁶⁾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人民大衆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즉 주체사상은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²⁷⁾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 제약되는 존재이면서도 자기를 제약하는 사회의 諸관계를 부단히 개변해 나감으로써 사회제도를 교체시켰고 역사를 진전시켜 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인간과 사회적 관계의 연관에서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제약되는 면보다 인간이 社會的 關係를 자기의 요구에 낮게 지배·개조하는 면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²⁸⁾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철학적 원리로서

26) 박승덕,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김창호 엮음, 「한국사회변혁과 철학논쟁」(서울: 한울, 1988), pp. 415~417 참조.

27)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1), p. 114.

28) 박승덕,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p. 407.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²⁹⁾로 이해하고, 이것이 사회적 존재의 객관적 조건을 사람의 이익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人間活動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본다. 즉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발전하려고 하며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사회적 이해관계에 맞게 자기활동을 규제하는 인간활동의 원인과 추동력이 된다. 주체철학은 객관적 세계에 대하는 주관적 요인을 인간의 本質的 特性으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세분한다.

자주성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되는 이유는 자주성이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創造性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³⁰⁾으로 정의되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³¹⁾으로 규정된다. 또한 주체사상은 意識性에 의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자유주의적인 인간의 개체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민」 또는 「민

29)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p. 15.

30) 위의 책, p. 17.

31) 위의 책.

족」의 집단적 주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상기의 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발전 원인과 더불어 사회·역사의 본질, 성격 및 추동력 등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사회·역사 운동의 주체로는 인민대중을 들고 있다. 사회·역사원리에서 人民大衆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³²⁾으로 규정된다. 또한 주체사상에서 사회·역사 운동의 본질은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³³⁾로 파악하고, 추동력으로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³⁴⁾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이 역사발전의 主體로 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고,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김정일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더욱이 지도의 주체는 당과 수령으로 규정되었다.³⁵⁾ 그러나 노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³⁶⁾로 전

32) 위의 책, p. 21.

33) 위의 책, p. 24.

34) 위의 책, p. 34.

35) 위의 책, pp. 22~23.

36) 위의 책, p. 23.

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指導의 本質은 수령의 지도를 의미하게 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사회·역사논리는 혁명적 수령관을 정당화시킴으로써 혁명적 수령관과 주체사상이 결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주체사상의 마지막 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원리를 실제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우선 먼저 自主性의 실현을 위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의미한다. 더욱이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치의 기본원리로 삼는다. 당, 국가기관, 근로단체라는 3가지 조직이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당은 政治路線을 결정함으로써 영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근로단체는 대중을 교육시키고 당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사상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경우에는 수령의 존재를 당, 국가, 근로단체 등 3가지 組織單位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와는 구별된다. 즉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총체적 지도노선을 결정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수령이라는 초월적 존재에게 공산당의 지도역할을 이양함으로써 수령이 사회주의 정책노선에 대한 총체적이고 유일적인 지도를 행하며, 黨은 수령의 영도를 정책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지도하는 집행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은 主權機關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령 일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유일 지도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수령은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모든 권력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唯一指導體系를 완전히 확립하게 되었다.³⁷⁾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세습체제의 정당화, 세습적 권력계승의 정당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대외적 독자노선의 추구, 자력갱생의 자립경제 건설 등의

37) 북한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다른 특성으로는 현재까지 15여년을 상회하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권력승계를 준비해 왔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하여 김정일을 주체체제의 계승자로 대중들에게 부각시키는 한편, 당 및 국가기구 지도부를 친김정일파로 교체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더욱이 북한의 권력승계가 단순히 지도자의 세습은 물론 주체형 사회주의체제의 계승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식 정치체제의 특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선로동당과 국가기관의 활동의 지침」이자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 지도사상」으로서 북한 사회를 全一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사상으로 제시되었으나, 혁명적 수령관의 영향으로 수령의 지도를 혁명과 건설을 성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담보로 주장함으로써 스스로가 역사발전의 주체로 천명한 인민대중을 역사의 被動體로 전락시킬 논리적 모순을 내재하게 되었다.³⁸⁾

경제에서의 자립은 경제가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로 규정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자립경제의 건설을 의미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經濟體制를 「자립적 민족경제」로 개념화하면서 폐쇄경제체제, 혹은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자신들은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³⁹⁾라고 밝히고, 사회주의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 강화는 經濟自立을 확보하고 경제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

38)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유기체적 체제관을 파생시켰는 바, 유일지도체제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전체사회를 규제하는 전일적인 지도체계라면 사회·정치적생명체는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당 국가 사회를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의 사회체제이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83, 295 참조.

39)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p. 50.

는 제국주의로 지칭하는 선진자본주의와의 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반제국주의적 정책노선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대부분의 대외경제관계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치중되었다.⁴⁰⁾

북한경제는 勞動力 중심의 경제건설 노선, 즉 대중동원에 의한 경제의 양적 성장, 중공업 우선원칙에 의한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공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군수산업 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重工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경공업부문 투자재원 부족을 야기, 인민 소비생활의 상대적 낙후성을 가져왔다. 투자재원 부족은 물론 기술수준의 낙후로 인해 인민 소비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란 인민대중의 노동력을 최대한 動員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한편, 북한 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물질적 자극이나 자유경쟁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의한 대중동원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의 特殊性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컨대 한국전쟁 이후 파괴된 북한사회를 조속

40) 북한은 전후 세계체제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제국주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후 미국주도하에 구성된 세계체제에서 후발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중진국의 사례가 북한의 이러한 인식상의 오류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1992), pp. 229~258 참조.

히 재건하고 산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자발적이고 혁명적인 참여와 동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위한 이념적 수단으로서 주체사상이 강조되었다. 또한 북한은 1956년의 宗派鬭爭을 전후로 김일성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1960년대 중·소분쟁 등의 사회주의 헤게모니 쟁투를 직시하고 사회주의 블록내에서도 북한의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 등도 주체사상이 배타적 민족주의 성격을 지니는 통치이념으로 확립되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北韓式 社會主義의 특수한 경험을 목적론적으로 이론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나. 階級獨裁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의 정치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청산한 기초 위에서 발생한 새로운 가장 높은 형태의 民主主義로 파악하고 있다.⁴¹⁾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 귀결되면서 마르크스-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전개되었다. 레닌은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의 독재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마르크스의 견해를 수용

4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77.

하였다. 레닌의 民主主義觀은 자신의 혁명관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그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계급지배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그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 독재로 규정하는 동시에 부르조아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國家類型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시한다. 그러나 계급권력으로서 독재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부르조아 독재는 부르조아 내부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내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처럼 레닌은 민주주의를 한 階級이 다른 한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독재란 계급권력 혹은 계급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지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서 파악되었던 것이다.⁴²⁾

이러한 레닌주의의 관점은 北韓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바, 김일성은 “온갖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위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⁴³⁾로 간주하였다.

42) 북한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1175.

43)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69.

프로레타리아 獨裁體系는 북한의 경우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 당, 계급, 대중이 전일체를 이루면서 “수령이 당,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 독재체계의 총체를 지도하는 최고령도자”⁴⁴⁾로 구성되어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사회주의에서의 민주주의 개념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입각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로 표현된다.⁴⁵⁾ 김일성 역시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⁴⁶⁾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社會·經濟的 條件이 계급지배와 착취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사용되는 다

44) 북한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1172.

45)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많은 이론을 넘겨 받았으나 계급독재의 개념에서는 마르크스와 구별된다. 마르크스는 계급독재의 개념을 모든 국가기구는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도구로 파악하는 반면, 레닌은 소련에서의 볼셰비키정당의 소수지배를 정당화시키고자 함으로써 전권을 위임받은 소수에 의한 권력행사로 이해된다.

46)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70;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에 적대적인 반혁명적 요소를 진압하고 혁명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쏠기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완전히 소멸하여 사회주의 세계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1176 참조.

수결의 원칙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전 인민의 공동이익을 수행하는 체제로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민주적인 것은 아니며 支配階級の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로 이해된다.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는 사라져서 형식적 민주주의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인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경우 정치체제의 형태 여부를 계급관계의 단순한 반영물로 파악하여 階級的 搾取關係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실질적 민주주의체제로 간주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문제로 맞추어지고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므로 자유주의적 권력분립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統制機構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중심의 집중화된 권력이 지니고 있는 폐해를 도외시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지배방식과 지배주체의 문제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에서는 계급지배로서의 민주주의와 지배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관련에 대한, 즉 민주주의의 內容과 形式간의 관련을 해명하는 것이 주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이론과 실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러

시아 혁명후 로자 룩셈부르크는 소련의 소수 支配體制가 인민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녀는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관이 계급지배라는 지배주체의 문제만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을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과의 논쟁⁴⁷⁾에서 볼셰비키정당에 권력이 집중되고 인민대중의 민주적 諸권리와 민주적 제도의 철폐로 말미암아 “단지 정부와 당의 추종자들을 위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자유는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보통선거가 없이, 언론과 집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자유가 없이, 그리고 의견의 자유로운 투쟁이 없이는 삶이란 모든 公共制度 속에서 화석화되어 버린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당, 국가 및 근로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채택하고 있다.⁴⁸⁾ 사회주의에서 조직의 원리로서 채택하고 있는 民主集中制는 회의과정에서 자유토론에 의하여 모든 조직을 구성하고 정치노선의 결정과정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만,

47)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의 논쟁은 Gilbert Badia, “Rosa Luxemburg und Lenin,” in Claudio Pozzoli, eds., *Rosa Luxemburg oder Die Bestimmung des Sozialismus* (Frankfurt/M. Suhrkamp, 1974) 참조.

48) 북한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435 참조: 민주집중제는 1903~1906년 사이에 볼셰비키에 의하여 러시아 상황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즉 혁명을 위한 정치조직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식으로 당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조직이 구성된 후 하위조직은 상위조직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정치조직(국가와 당)의 통제, 하위관청의 상위관청에 대한 절대적 복종, 계획수행에서의 엄격한 규율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⁴⁹⁾ 그러나 북한의 경우 민주집중제는 유일지도체계로서 首領論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주집중제의 첫번째 원칙인 자유토론에 의한 조직구성의 원칙과 정치노선의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주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당내의 기득권자를 억제할 수 있는 당내민주주의마저도 당내의 분파형성이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한다는 미명하에 억압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支配階層은 인민대중에 봉사한다는 명분하에서 인민대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우위가 형성된 북한의 국가형태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결핍되어 국가관료는 새로운 계급으로서 등장한다. 따라서 社會的 民主主義도 존재하지 않아서 전체사회는 민주주의적 구조를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관료가 신계급으로 등장하는 원인으로는 국가기구를 시민사회가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경제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북한사회주의체제는 生産手段의 국가소유를 전제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국가가 포괄적으로 규

49) 북한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435.

제하는 체제로 특징지워진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소유의 특유한 형태이다.⁵⁰⁾ 국가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체제에서 경제적 결정의 모든 과정, 예컨대 국민소득의 성장율, 축적과 소비에 대한 분배율, 개인적 소비와 사회적 소비의 분배율, 산업과 지역별 축적자금의 분배 등은 國家權力에 의해 전일적으로 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의 일반적인 경우 경제적 권력은 기업이 소지하고 정치권력은 국가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또는 정치와 경제는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는 정치와 경제, 국가와 사회의 相對的 分離는 존재하지 않고 상호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는 국가가 사회를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생산관계는 국가소유를 토대로 하는 국가사회주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국가사회주의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우 국가기구를 담당하는 국가와 당의 관료는 국가소유의 生産關係에서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한

50) 북한은 소유관계를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의거하여 全人民的 소유와 協同的 소유로 대별하고 있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소유 형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기업, 공공기관 재산, 공공주택 등이 속한다. 협동적 소유는 小商品生産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이다. 그러나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형태로 이행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형태가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 분야는 특히 農業分野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統一院, 「北韓概要 '91」(서울: 統一院, 1990), p. 119 참조.

다.⁵¹⁾ 신계급으로서 국가계급은 사회의 생산 및 재생산과정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지식」의 소지자들이다. 이들은 고도의 지식을 사용하여 階級的 地位를 점유하고 사회·경제적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잉여의 일부를 수취한다.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와 경제의 특수한 관계는 권력과 지식의 독특한 관계를 배태하고 있는 바,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인민대중과 국가계급으로 대립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敵對的 關係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중앙계획하에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분리되고 참여가 봉쇄된 권위주의적 계획으로 말미암아 직접생산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살하였다. 國家社會主義에서의 노동의 사회화 형태는 대중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목적하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외된 노동의 성격을 극복하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勞動疎外를 극복하려는 원래 사회주의적 시도⁵²⁾는

51) 북한 관료부패에 대해서는 김성철, 「북한관료부패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52)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가치증식과정이 이윤동기로 인하여 노동과정을 예측시키므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성이 극대화되고 노동의 소외 역시 집중하게 된다. 생산수단의 점유자로서 관료가 노동력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국가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의 이상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직접생산자의 집단적 소유체제하에서 투자·소비과정을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하는 자주관리제도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어지는 합리적 중앙계획을 시사하고 있다.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복지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조합의 요구가 생산목적에 예속되었고 노동조합은 공산당에 의하여 철두철미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북한에서의 국가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일제식민지 경험에 따른 반제국주의적 민족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유교적 전통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일제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체계화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유교적 전통주의가 결합하여 주체사상에서의 유일지도 체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자유, 평등 등의 이념이 구현된 선진사회와는 절연되어 자유없는 평등이 지배적 이념으로 구현된 폐쇄적이고 全體主義的인 국가형성을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다.

第 III 章 統一韓國의 理念的 基本價値

1. 統一의 基本理念으로서 民族主義

민족(Nation)이란 민족성원이 경제·언어·문화·종교·정치적 영역에서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共同體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족(Nation)은 경제·사회·문화공동체는 물론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근대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족 또는 종족집단 등의 「소수민족」(Nationalität)과는 구별된다. 소수민족의 경우 역사적으로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한 사회집단에 의해 점차 용해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近代的 民族國家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⁵³⁾

민족형성 방법은 「국가민족」(Staatsnation)과 「문화민족」(Kulturnation)의 두가지 방식으로 대별된다.⁵⁴⁾ 「국가민족」은 개인적·집단적인 자결권의 토대 위에서 개인이 특정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에의 소속을 표명함으로써 형성되는 民族共同體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개인은 일정한 영토내에서 특정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된다. 「국가민족」이란 방법을

53) 예컨대 소수민족 문제로는 중동지방의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형성 시도는 난항에 부딪히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하여 독립국가 형성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4) F. Meincke, *Weltb rge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1969), p. 17.

통하여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형성한 전형적인 사례는 영국, 프랑스, 특히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서 발견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상, 인종적 기원, 종교적 신념 등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평등한 국가시민으로 구성된 政治共同體, 예컨대 근대적 민족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⁵⁵⁾

이에 비해 「문화민족」(Kulturnation)은 공동의 혈통, 언어, 종교, 관습, 역사 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식으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문화민족」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의 소속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민족공동체에의 소속이 역사적·자연발생적으로 결정되는 運命共同體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 「문화민족」은 공동체의식을 관리하는 정치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채 존속될 수 있다. 1772~1918년 3개의 왕국으로 분할된 폴란드,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되기 전의 독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민족」에 입각한 공동체도 19세기에 전개된 民族統一運動에 의해 점차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국가민족」으로 전환되었다.

「민족」은 내적으로 동질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 차별성과 분리주의를 지향한다.⁵⁶⁾ 「국가민족」의 방식을 통해

55)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영·미권에서 민족(Nation)은 국가(Staat)와 민족(Nation)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민족은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56) L. Mårnora, *Nation und Internationalismus* (Bremen, 1983), p. 79.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한 프랑스의 경우, 시민계급이 내적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 및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상을 기치로 내걸면서 신분제 사회를 해체시키고 지역경제를 國民經濟로 통합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외적으로 시민계급은 다른 민족에 대한 특수성 및 분리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반면 「문화민족」의 방식을 통해 민족국가를 수립한 독일의 경우, 내적으로 인종주의적이고 문화적·언어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동질성을 확보하는 한편, 外的으로는 「문화민족」적 특수성을 토대로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서유럽에서는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하여 신분으로 분리된 봉건사회를 해체하고 자유, 평등 등의 기초 아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유기적 통일체인 近代的 民族共同體(Nation)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 형성의 기본단위인 「민족」(Nation) 내부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일반이해로 전화시키는 과정에서 민족의 주도권을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차별성과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민족」 상호간에도 民族利益의 추구로 인하여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계급은 민족주의적 담론을 통하여 봉건적 지역주의를 비판하고 근대적 단일 민족국가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를 동질화시키는 한편, 다른 민족공동체와의 상이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특수성을 배양시켰다. 예컨대 18세기 말 서유럽에서 시작된 近代 民族主義는 자유, 평등, 박애

등을 바탕으로 한 민족국가 형성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적 통합을 도출하는 정치이념으로 기능을 하였다.

이처럼 서유럽에서는 시민계급의 헤게모니가 구현된 이념체계로서 민족주의가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과거 서유럽 民族主義가 언어, 종교, 인종, 문화 등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르조아지의 헤게모니와 결합시킴으로써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기본이념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유럽의 민족주의는 이들 민족국가의 경제적 토대인 자본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하자 제국주의로 화하여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소민족을 식민지로 만드는 등 攻擊的 民族主義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는 파시즘을 들 수 있다.

서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이와 같이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계급적 갈등요인을 제외하고는 특정지역 내에서 문화·이데올로기, 언어상의 이질적 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國民統合過程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⁵⁷⁾ 또한 봉건제가 몰락하고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새로운 민족국가 형성을 주도하는 시민계급이 형성된 점도 근대적 의미의

57) 앞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의 경우 전형적인 「문화민족」(Kulturnation)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대국가 형성 전에도 문화, 언어, 가치체계 등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족국가 형성에 유리한 사회·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서유럽에서 근대적 「국가민족」(Staatsnation)이 형성될 무렵 민족국가간 경제적 발전격차는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 發展도 제국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이 지체된 후발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등도 동질성이 강한 「문화민족」(Kultur-nation)을 기반으로 그 이전에 민족국가를 형성한 영국, 프랑스 등의 식민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近代的 民族國家를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유럽과는 달리 대부분 제3세계의 경우 근대 민족국가 형성과정은 극히 파행적으로 전개되었다. 비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자체적 역사 발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서유럽 자본주의의 팽창에 의해 이식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마련될 수 없었다. 즉 先進 資本主義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축적을 세계시장으로 점차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서구사회는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등 역사적 단절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非서구사회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자의적 영토 분할로 인해 인종의 다양성, 언어, 문화, 종교 등의 이질성이 증폭된 결과, 사회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 형성은 불완전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자본주의 발전이 자연발생적으로 진척되기 위해서는 封建

제의 태동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비서구사회에서는 부르조아 계급의 발생은 물론 봉건제도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비서구사회에서 국가형성과정을 고찰해 보면 전근대적 의미의 「문화민족」과 「국가민족」의 일치성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주도세력 없이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위로부터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의 추진되었기 때문에 民族國家 形成은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혼재하는 등 극히 파행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약소국들은 선진국들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내적으로는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저항적·방어적 民族主義를 이념체계로서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적·방어적 민족주의는 20세기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 경우 수립된 근대국가에서의 체제 내용은 사회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⁵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헤게모니가 반

58) 민족주의는 전체 계급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통합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중주의 등의 다른 이념체계와 접합되어 「담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족주의 이념은 일치하나, 민족국가의 성격은 민족주의 운동주체에 의해 다르게 각인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이념체계는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E. Laclau and C.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Schocken Books, 1985) 참조.

영되어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排他的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행사해 온 강대국에의 예속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 민족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도 비서구사회의 민족주의와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들이 한반도를 經略할 때 조선헌왕조는 강한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문화민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민족」의 형성을 과제로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운동이 계급적 주체가 없이 단지 상층부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韓末 民族主義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여 조선은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에 실패한 한국 민족주의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또 한번 시련을 맞게 된다. 남북한 공히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에 합당한 문화·언어·종족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으나, 분단 후 상이한 체제하에서 상이하게 형성된 文化樣式으로 인해 동질성이 강한 「문화민족」의 내용도 현재 상당 정도 훼손되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한국에서 근대국가의 체제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전체 사회는 권위주의적으로 구조화되는 등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경제적 의미의 자본주의를 의미할 뿐 政治·社會的 民主主義를 갖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편 북한에서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을 살펴볼 때 언어·문화·역사적 공동체로서의 「문화민족」은 어느 정도 남한과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으나,⁵⁹⁾ 「국가민족」 형성과정은 남한과 상이한 길을 걸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인 理念體系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공산당 영도를 전제로 하는 당-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편, 국유화와 집단화의 특징을 지닌 사회주의 경제구조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견지하고 있으며, 진영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南北韓 民族主義의 대외적 성격을 고찰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가 여전히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 요소를 배태하고 있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분리주의를 국가이념으로 外在化하지는 않았다.

단일의 「국가민족」 형성에 실패하여 한국에서 형성된 「민족」은 단일민족공동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미완의 공동체에 불과하다. 이는 남북한간에 역사적 공유의식, 문화적 전통,

59) 북한은 최근 민족을 구성하는 징표로서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 등을 강조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문화민족」 개념에 상응하는 민족성의 징표로서가 아니라 단지 북한민족이 중국, 러시아,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핏줄 및 언어도 틀리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언어 등의 동질성을 토대로 하는 「문화민족」의 범주에서 파악될 수 있는 민족적 동질성만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민족」으로서 근대적 統一民族國家 수립은 체제 갈등으로 인해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역사적 공유의식, 언어, 종족 등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문화민족」과 국가의 제도적 공간을 의미하는 「국가민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한민족의 統一民族國家의 형성에 있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공히 「문화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복리와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을 기대하고 있으나, 「국가민족」적 측면, 즉 통일민족국가의 體制理念的 性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극히 제한적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⁶⁰⁾ 자유민주주의 또는

60) 진덕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체제이념보다도 상위의 정치이념으로 상정하고, 한국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민족통합과 발전의 변증법적인 지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체제이념은 상호 대체할 수 없는 정치이념이기 때문에 체제이념에 대한 민족주의의 우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미래구도: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의 정향,”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참조.

인민민주주의,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아닌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제3의 체제가 존재한다면 민족주의 이념에 의한 통일민족국가의 형성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이념을 화해시키는 제3의 체제는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民族主義는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이념적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한민족의 공영을 약속하는 체제이념이야말로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이념적 충분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2. 體制理念的 基本價値

통일한국의 이념체계는 우선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기본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주관적으로 모든 人間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은 초국가적인 自然法的 原理로서 양도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인간 고유의 가치인 동시에 헌법상의 최고원리이자 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다.

통일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 「평등」 및 「복지」라는 기본가치의 구현이 요구된

다.⁶¹⁾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적 기본가치는 기본적으로 인간 개인의 自我實現에 있으므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자유와 평등은 통일한국의 기본가치로서 당연히 요구되며,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상태로서 복지 역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가. 自 由

철학적인 개념에서 자유는 자아의 표현, 자결, 자아완성에 서 출발한다. 자유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면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意志의 表現이다.⁶²⁾ 그러나 스피노자(Spinoza)는 자유를 객관적 필연성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자유를 객관적 필연성으로부터 탈피해 있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유를 인간의 인식수준의 발전에 따라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칸트(I. Kant)는 스피노자의 자유 개념을 발전시켜서 특정 물적 구조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객관적 필연성은 因果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고,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러한 객관적 필연성을 파악하여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칸

61) 권영성, 「헌법학원론」, pp. 292~321 참조; 통일한국의 기본가치로서 자유, 평등, 복지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에서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유와 평등을 선정하였고,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복지 개념을 택하였다.

62) Georg Klaus and Manfred Buhr, eds., *Philosophisches Wörterbuch* (Berlin: das europäische Buch Verlag, 1974), p. 423.

트적 자유관은 헤겔에서 보다 역사화되어 역사발전 과정에서 객관적 필연성이 自由의 意識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⁶³⁾

마르크스(K. Marx)의 자유 개념은 인간성의 발현을 억압하는 자연과 사회의 필연성으로부터 인간소외가 극복된 상태로 묘사된다.⁶⁴⁾ 여기에서 자유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및 개인과 자연과의 관계가 갈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인간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연법칙을 충분히 규명하여 자연으로부터 疎外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소외를 극복할 경우 인간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유의 개념은 시공간적으로 초월적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서 발생되어 변천되어 왔다. 일찌기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탄생된 자유 개념은 외부의 침입에 대한 자기 집단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완벽하게 자기 집단을 유지하려는 慾望을 의미하였다. 아울러 고대인들은 한 국가내에서의 모든 시민들에게 권력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자유로 간주하였다.⁶⁵⁾ 즉 고대시민들의

63) Ibid., p. 424.

64) K. Marx/F. Engels, *MEW 1* (Berlin, 1977), p. 376.

65) 노르베르트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p. 12.

물질적 재생산이 노예에 의해 보장되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권력에의 참여를 自我實現의 최고수단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자유의 개념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집단적 자유의 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의미하였다.

스토아學派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개인이라는 개념을 창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⁶⁶⁾ 더 나아가 종교개혁은 개인의 권리를 자유의 범주로 상정하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프로테스탄티즘은 인간 존재의 어느 부분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권위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전통은 개인의 정신적 내면화와 외적 권위에의 저항을 통해 인간주체의 自律性에 근거한 개인의 근대적 자유의 도덕적 원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⁶⁷⁾ 그러나 개인의 근대적 자유는 개인이 어떠한 권위에도 침해받지 않는 자연권 구현의 범주에서 시민의 경제적 자유의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구체화된다.⁶⁸⁾

66) E. R. A. Seligma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93), pp. 442~447 참조.

67) 노명식, 「자유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3), p. 10.

68) 자유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접근법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정치적으로 획득한 권리를 구별하는 데에서 보여진다. 전자는 자

따라서 자유는 시기별로 고대적 자유와 근대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古代的 自由는 주권 전체의 많은 부분을 집단적·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자유이고, 근대적 자유는 대의제에 의한 주권행사라는 정치활동과 아울러 개인적 활동의 자유, 즉 개인활동과 사적 활동의 독립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개인적 자유를 의미한다.⁶⁹⁾ 근대적 자유의 핵심인 個人的 自由는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해 유일한 최선의 판단자이며, 사회는 그에 의하여 해를 입거나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그의 행동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⁷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개인적 자유는 각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방식대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⁷¹⁾

個人的 自由는 정치적 자유 또는 정치적 권리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피치자가 통치자의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간섭은 한 개인의

연권, 후자는 민권 또는 정치적 권리로 불려진다. 오늘날 추세는 자연권 개념을 배척하고 모든 권리를 민권으로 부르거나 「자연적」이라는 용어를 「인간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전통적 준별은 아직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라이만 타우워 샤프첸트,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서울: 한울, 1994), p. 113 참조.

69) 노르베르트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12.

70) A.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1833-1840)*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8), p. 66.

71)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Liberty, Representative Democracy* (London: Longman, 1962), p. 277.

이익 추구가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의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행동은 公權力의 어떠한 침범으로부터도 보호된다.⁷²⁾ 국가는 자유를 제한하려고 기도하는 논리적 혐의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다수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내 견제와 균형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재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사야 버를린(Isaiah Berlin)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또는 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생활 영역에서의 개인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지칭하였다.⁷³⁾ 그러나 個人的自由는 개개인이 자신의 사적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72) 존 로크(John Locke)와 같은 사상가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결코 포기되거나 침탈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사회와 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이러한 권리가 양도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한 사회와 국가도 이러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기도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상가들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설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자연권이 국가에 그러한 제한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Norberto Bobbio, *Die Zukunft der Demokratie* (Berlin: Rotbuch Verlag, 1988), p. 120 참조.

73)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121~122; 서구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언론, 출판, 종교, 집회 등과 같은 생활영역에서의 개인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영역으로 규정되어진다. 라이만 타우워 샤르젠티,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p. 115.

그 성취수단 및 방법으로 활용하는 자유, 즉 순수한 절차적 의미에서의 형식적 자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대두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初期 自由主義에서 개인적 자유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절대적 권리들의 핵심이라고 간주되어 평등의 개념은 물론 정의의 개념과도 분리되었다. 특히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자유는 질적 기준이 아니라 양적 기준에 입각하여 질적으로 상이한 것 중의 선택이 아니라 양적 차이 중의 선택의 의미로 사용되므로 견제가 부재한 상태로 정의된다.⁷⁴⁾

자유는 制約에 대한 거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단지 질서유지자로 파악되었다. 서구 역사상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의 본질은 외부권력에 의한 정치적·종교적·경제적 지위에의 예속에서 개인의 해방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의 강령에서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파악되는 社會觀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규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국가가 사적 영역에서 개인간 경쟁

73)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121~122; 서구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언론, 출판, 종교, 집회 등과 같은 생활영역에서의 개인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영역으로 규정되어진다. 라이만 타우워 샤르젠트,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p. 115.

74) 임효선, "분단국 이념통합의 과제," 「현대국제정치론」(윤근식 교수 화갑기념논총) (서울: 대왕사, 1991), p. 556.

의 심판자 역할을 할 경우, 자유방임주의는 개인들의 자아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초기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할수록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소극적 자유」는 대중에게 自我實現을 위한 공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재산의 심각한 불평등은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의 획득에 있어서 심각한 격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의 실현은 평등한 분배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⁷⁵⁾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은 협애화되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와 일반대중의 자유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消極的 自由」로 표현되는 개인적 자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의 개념은 「적극적 자유」로 확대된다. 「적극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로 표현되는 「소극적 자유」가 개인의 물질·문화적 재생산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사회가 각 개인의 완전한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의미한다.⁷⁶⁾ 따라서 「積極的 自由」의 영역은 개인들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고 여러 대안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합리적인 자기통제 또는 자율의 영역으로 파악된다.

75) Lawrence C. Becker, *Property Rights: Philosophic Foundation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pp. 223~250 참조.

76) Christian Bay, *The Structure of Freedo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참조.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 전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積極的 自由」를 강조한다. 「적극적 자유」는 사회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에 대한 권리는 물론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은 그 기준이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적극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人間의 尊嚴性을 실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의 보장,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개인적 권리의 정치적 보장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실천의 다양한 형태를 함의하고 있다.

자유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로서 파악될 경우, 그 범위가 외재적 영역과 내재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의지의 자유, 행위의 자유 등 개인적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자유는 자유의 외적 영역에 해당하며, 자율성, 자아실현 등은 일반적으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內在的 自由에 준거하고 있다.⁷⁷⁾ 개인적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

77) 사르토리는 자유를 그 자신이 설정한 특별한 방식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이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자유(freedom)는 자유의 내재적 범주를 지칭하고 자유(liberty)는 사회적·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의 외재적 범주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권리란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의미한다. 라이만 타우워 샤프 젠트,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p. 112 참조.

와 자아실현의 제반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 자유」는 내재적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조성하는 도구적인 「상관적 자유」이다.⁷⁸⁾ 그러나 내재적 자유의 실현정도는 사회적·역사적 구조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유의 내재적 영역은 외재적 영역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자유의 外在的 要件이 조성될 경우 자연 및 사회로부터 인간소외를 극복해줄 수 있는 자유의 내재적 조건은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유외의 외재적 조건으로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면 자유의 내재적 조건은 충족되어 총체적 의미에서 자유의 실현은 가능하게 되지만, 자유의 외재적 조건의 실현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個人的 自由, 즉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행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사회가 「소극적 자유」를 규제하고 일반대중의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 함양을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적정 수준에서 調和와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기준에서 평가할 경우, 남한은 「소극적 자유」의 행사가 「적극적 자유」 보

78) 사르토리,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p. 411.

다 훨씬 우선하고 있으며, 북한은 「소극적 자유」가 전무하고 오로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統一韓國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는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와 균형이 추구되어야 한다.

나. 平 等

역사적으로 평등에 대한 갈망은 자유의 한 측면으로 표현되었다. 모든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에서 동등하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평등 개념의 발전은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고안된 自然法의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란 기본적으로 내재적 자유,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아실현을 위한 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등의 기본개념이 正義의 개념으로부터 추론되었다고 보았을 때, 「개인적 정의」는 각자가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갖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⁷⁹⁾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은 점차 配分的 正義가 아니라 산술적 평등의 적용으로 전환되어 약자로 하여금

79) 위의 책, p. 461; 롤스(J. Rawls)의 사회적 정의 개념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라는 격언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각자에게 공평한 몫을 분배하되, 공평한 몫은 그 몫이 다르게 된 것에 대한 어떠한 정당화가 없는 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참조.

강자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등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게 되었다.

평등의 범주는 사법적·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적·정치적 평등은 모든 者에게 법적·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평등한 보호로 이해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단기간에 걸친 실험에 불과하였다. 즉 司法的·政治的 平等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배제하기 위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社會的 平等은 개인을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사회적 평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평등의 기초가 된다.⁸⁰⁾ 빈곤계층은 상류·중산층과 문화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階層間的 間격이 좁혀져야 한다. 예컨대 상류층 자제를 위한 귀족교육은 특권 의식, 적대감 등의 사회적 불평등의 기초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 장벽을 세우는 계급 및 계층은 사라져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성숙되어야 사회적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

80) 라이만 타우워 샤프젠트,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p. 110.

機會의 平等은 재능에 따른 직업의 선택과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기회에서의 평등한 접근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평등한 출발을 의미한다.⁸¹⁾ 각자에게 가장 공정한 출발이 일단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개인은 그의 장점과 능력을 통해 競爭에 따른 배분과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평등 개념은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조건의 평등은 원칙적으로 기회에서의 평등한 접근을 의미하는 접근의 평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출발조건의 평등은 접근의 평등보다 소득의 社會的 再分配를 요구하고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평등한 접근은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반면, 출발조건의 평등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經濟的 平等에 관한 통상적 논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 물질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개인들은 시민으로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自我實現이라는 자유의 내재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평등은 단순히 산술적 의미에서

81) 사르토리,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 II」, p. 468; 출발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사회구조가 경쟁을 매개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인간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경제적 평등의 강조가 되어서는 안된다.⁸²⁾ 산술적 의미에서 경제적 평등은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⁸³⁾ 흔히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 사법적 평등이나 정치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으로 표명되고 실질적 평등은 계급의 철폐에 따른 물질적 평등으로 선언된다. 形式的 平等이란 개인간의 불평등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와 취급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식적 평등없이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현존사회주의의 붕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 기본원리가 사법적·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의 평등에서 찾아지는 한 평등과 자유는 양립 가능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 脫所有를 통해 비례적 평등이 아닌 산술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경우 평등은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평등이 자유의 조건이라는 명제는 상정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인류 역사상 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自由가 평등의 조건이라는 명제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82) 어느 정도의 경제적 평등을 획득하려는 노력과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직접적인 갈등을 촉발한다. 이 점은 후술한다.

83) 토크빌은 자신의 사회주의 비판에서 평등화 및 민주화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토크빌은 자유의 정신과 결합되지 않는 평등의식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독립적 활동영역의 확대와 자립적 활동에 대한 가치부여에 의해 실현되는 합리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크빌은 사회주의가 개인들의 독립적 활동영역을 좁히고 개인들을 집단의 도구로 삼음으로써 결국 제약과 예종 안에서 평등을 달성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노명식, 「자유주의」(서울: 종로서적, 1983), p. 22 참조.

수 있다.⁸⁴⁾

정치적·사회적 평등 및 기회의 평등에 관한 요구는 자유주의적 요소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⁸⁵⁾ 이는 자유주의가 政治的 平等의 범주인 보통선거권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반면, 보통선거권은 민주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는 계급 및 지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보다 정치적 자유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평등 및 기회의 평등에 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平等의 基本原理를 남북한에 적용하면 남한의 경우 정치·사회적 평등은 구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회의 평등 및 경제적 평등의 실현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어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사회적 평등은 참정권도 확보가 안되는 등 극히 저열한 수준에 있으며, 기회의 평등만이 상당 정도 확보되었을 뿐 경제적 평등은 算術的 意味에서 확보됨으로써 발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평등은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고 강화

84) 사르토리,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 II」, p. 470.

85) 불평등은 자연적 행위의 결과이고 평등은 탈자연화의 귀착점이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사회의 자연적 관성의 법칙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평등이 추구될 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부, 지위 등의 차이는 수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R. H. Tawney, *Equality* (London: Allen & Unwin, 1952), p. 47.

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개인적 자유 그 자체가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기본가치로서 自由主義的 自由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질서를 탈자연화시키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의 평등 추구는 보다 큰 평등을 위해 더 작은 개인적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 자유를 담보로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을 모든 경우에서 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絶對的 平等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가 보여주듯이 개인적 자유를 파괴하고 효율성의 결핍으로 인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평등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의 조화 속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즉 配分的 正義를 실현하는 평등이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로서 평등은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가 共同體 意識을 파괴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이 될 정도로 불평등을 극화시켜서는 안되며, 경제적 평등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의 효율성을 저해해서도 안된다.

다. 福 祉

사회복지⁸⁶⁾의 제고는 개인의 생활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개인의 생명과 자아를 유지시키는 한편,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 및 응집력을 강화하여 사회를 하나의 共同體로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이념적 기본가치로 사회복지의 제고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의 가치적 존재인 한,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理想이며 生活目標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신적 안정 및 물질적 여건의 충족 등을 포함하여 심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감정적 발달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는 것이 社會福祉의 실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성원들의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조건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이며, 충분조건은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 및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經濟成長이 없다면 사회성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은 절대적으로 향

86) 영어의 welfare란 단어는 웹스터(Webster) 사전에 의하면 well과 fare의 복합명사로서 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태도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의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 social이란 형용사가 부가되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뜻한다. 영어의 Welfare는 독일어의 Wohl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 단어는 Wohlfahrt와 같은 의미로서 「인간의 복지생활」을 의미한다.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서울: 서울대학출판부, 1986), p. 1 참조.

상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 배제된 분배구조는 전체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신 특정계층의 이익에 종사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비)물질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 및 사회보장제도의 완비가 국민의 厚生福祉를 제고하는 요체가 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는 국민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는 인간의 우월본능에 입각한 경쟁기제가 결여되어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의한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福祉水準의 향상에는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쟁을 매개로 효율성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지니고 있으나, 실업,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를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경제성장의 결핍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없으며,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본질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는 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社會統攝을 저해하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산업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자의 증가, 노동력의 지리적·사회적 이동, 핵가족제

도 등장에 따른 실업문제, 노인 및 아동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都市化는 인구집중을 야기하여 도시에서의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산업화는 인구관계 및 사회내 계층 분화를 가져와 사회 연대성에 입각한 전통적인 상호부조양식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근대적 사회관계는 利益指向的이어서 인간소외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근대적 인간관계는 인간을 평등하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단지 경제적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거의 공동사회가 가졌던 정의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의 社會的 再生産은 어렵게 된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실업, 질병, 산업재해 위험, 퇴직후 소득보장문제, 보건·위생·주택문제와 더불어 핵가족화에 따른 청소년 및 노인문제 등 개인의 복지를 저해한다. 이처럼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사회에 있을 경우 「非복지」라고 칭하기 때문에⁸⁷⁾ 여기에 사회성원간의 상부상조로서 복지의 희생자에게 급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의 정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社會福祉는 일부 빈곤계층에 한정되는 서비스로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지향하는 수준과 목표는 특정사회의 총체적

87) 위의 책, p. 13 참조.

인 역량에 달려 있다. 사회의 총체적 역량은 한 사회나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념 등의 문화적인 요소, 정치·경제적인 요소 및 제반 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總體的 構造를 지칭한다. 따라서 복지의 형태 및 구조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경제적 합리성 및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주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기 때문에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분배의 형평성 및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등한시된다. 반면 資本蓄積이 상당 정도 이루어져 선진사회 구조에 도달한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 분배의 형평성 및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된다. 자본주의의 역사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개발도상국의 「보충적 모형」에서 「산업적 성취수행 모형」을 거쳐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⁸⁸⁾ 물론 이러한 變貌過程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단선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변화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⁸⁹⁾

88)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서울: 유풍출판사, 1993), p. 53 참조; Tismuss는 보충적 복지모형, 산업적 업적달성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반면, Lebeaux와 Wilensky는 사회복지 유형을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R. M. Tismuss, *Social Polic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8); C. N. Lebeaux, and H. L. Wilensky,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Free Press, 1965) 참조.

89) 앞에서 논의한 사회복지 모형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 개념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비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소멸된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파

사회복지 모형 가운데 「보충적 모형」이란 개인의 물적 재 생산이 사적 시장과 가족에 의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가족이나 시장경쟁으로부터 탈락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치료·예방의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社會的 給付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⁹⁰⁾ 이 경우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⁹¹⁾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나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자선사업·구제사업·사회사업이 사회복지의 주요대상이 되기 때문에 社會福祉는 단지 사회의 최저생활을 하는 빈곤자들에게 사회적 급부를 주는 모형이다. 이러한 사회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한정된 사회복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의 수준이나 재원의 부족에 따라 적절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모형이지만, 이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經濟的 自由를 보다 상위에 놓는 자유주의적 사회복지 모형이라고 하겠다.

「보충적 사회복지 모형」은 발전되면서 「산업적 업적달성 모델」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델은 사회복지와 경제발전과

악한다. 따라서 복지혜택은 실질적인 경제평등의 원칙에 입각,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욕구에 기초하여 전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의·식·주·의료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90) R. M. Tismuss, *Social Policy*, pp. 30~31.

91) Philip Klein, *From Philanthropy to Social Welfare* (San Francisco: Jossey-Bass, 1968), p. 7.

의 연관 속에서 생성되었다. 「산업적 업적달성 모델」에 따르면 社會福祉는 업적, 업무수행 및 생산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⁹²⁾ 이 모형은 논리전개를 동기, 노력과 보수를 계급구조 및 집단의 충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다양한 경제적·심리적 이론에 기반을 둬으로써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機能主義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흔히 시녀적 모델로 불리운다.

한편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종합적 제도로 간주하여 시장경제 메카니즘 밖에서 욕구의 원리에 입각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⁹³⁾ 社會制度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습화되고 공식화된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속·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사회화 기능, 사회통합 기능, 사회통제 기능, 상호부조 기능 등 필수적인 制度的 機能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모형」이 아니라 신체적인 면에서의 건강, 물질적인 풍요, 번영, 부, 정신적 안정 등의 다차원적인 복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92) R. M. Tismuss, *Social Policy*, p. 31.

93) Ibid.

제도와 더불어 교육, 보건, 주택, 환경, 노동복지 등의 社會政策的 側面을 망라하는 광의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이 경우 복지 개념은 최저소득의 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성원 개개인의 발전을 극대화하려 하며,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구현 등이 중심가치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복지는 전체사회의 목적 개념이 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의 주체를 고찰해 보면,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은 최근에 와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이 보다는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福祉社會 概念이 대두되고 있다. 즉 복지사회의 이념은 복지의 실천주체를 정부로 집중시키는 대신 협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정부를 포함하는 전사회로 분산시키고 복지 증진을 모든 사회제도의 목표로 삼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서비스의 범위 및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개인의 창의력 개발과 자기구현의 도모를 의미한다.⁹⁴⁾ 따라서 복지가 구현된 福祉社會란 정부에 의한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와는 달리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시민의 자기구현과 자기성취에 공헌하는 정도에

94) 티트머스(Titmuss)는 복지국가를 복지사회의 전제조건으로 보면서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확대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롭슨(Robson)은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복지국가의 도덕성 결핍현상을 지적하면서 복지국가를 맹목적으로 지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과 태도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주었다.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p. 423 참조.

따라 사회의 구성요소가 평가되는 사회를 지칭한다.⁹⁵⁾ 이렇게 보았을 때 복지사회의 개념은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윤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社會의人間化」요구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⁹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모형은 보충적 복지모형으로부터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국가개입을 통한 사회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복지모형의 발전을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북한의 복지체제는 사회주의의 핵심적 제도로써 사회주의 건설초기부터 包括的 制度化를 통해 정착되었고, 이에 비해 남한의 복지체제는 성장 위주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보충적 복지모형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⁹⁷⁾ 하지만 북한은 결

95) 일본은 1979년 일본형 복지사회를 제시하였다. 일본이 지향해야 할 활력 있는 복지사회란 자립, 상호부조, 민간의 활력을 기본으로 하여 적절한 경제성장하에서 각 개인이 적절한 취업의 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용, 건강 및 노후의 불안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확보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본형 복지사회는 그 내용면에서 원래 의미의 복지사회 개념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국가 역할의 대폭 축소를 변호하기 위해 복지사회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96)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복지사회는 사회일반, 전체사회, 지역공동사회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빈곤 및 실업 등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사회는 점차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의 비화폐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범죄 등의 비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p. 424 참조.

97) 1991년 현재 남한의 사회개발비는 GNP대비 4.5%이고, 순수사회보장비

과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삶의 조건을 균질화하는 한편 주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였으나, 주민들의 후생복지의 수준은 결핍의 경제와 새로운 身分制에 의해 극히 저열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⁹⁸⁾ 반면 남한의 경우 현행 복지체제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생복지의 수준과 범위가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일한국의 理念的 基本價値로서 복지는 통일 이전의 경우 북한사회에 대한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 복지의 기본가치는 통일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및 통제 기능으로 역할을 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란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社會統合的 機能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후생복지 수준의 제고야 말로 민족구성원 사이에 동류의식과 연대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견고한

는 GNP대비 1%이며, 전체 예산 중 보건사회부의 예산은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사회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보건의료·사회보장부문 계획」(서울: 보건사회부, 1992), p. 253.

98) 1990년도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18.8%로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 순수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정수, 「남북한 사회정책 변천의 비교연구」(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p. 124.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의 이념적 기본가치를 고찰할 경우,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부터 「적극적 자유」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와 동시에 평등의 개념은 정치·사회적 평등으로부터 기회의 평등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은 시민권이라는 개념하에서 포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市民權이란 사회성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지위이며,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시민적 권리는 자유권이며, 정치적 권리는 참정권, 사회적 권리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의미하는 社會權을 의미한다.⁹⁹⁾ 이를 실제에 적용해 볼 때 한국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 불리는 자유권이 확보되는 단계에 있으며,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권의 확립은 극히 초보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統一韓國의 이념적 기본가치로서 자유, 평등 복지의 구현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99) T. H. Marshall, *Social Policy*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Press, 1965), pp. 9~11.

第 IV 章 統一韓國의 體制理念

앞에서 통일한국의 이념적 기본가치로서 자유, 평등, 복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기본적으로 상호갈등적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본가치가 單一的으로 구현된 체제이념도 갈등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유, 평등 및 복지의 기본가치를 어떠한 방식에 따라 조화시키는가에 따라 체제이념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의 기본가치 상호간의 갈등, 결합, 조화의 偏重關係를 분석함으로써 자유, 평등, 복지 등이 구현된 가장 바람직한 체제이념을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체제이념을 자유와 평등의 대립관계로부터 추론함과 동시에 資本主義가 자유와 평등간 조화의 편중에 따라 다양한 체제이념으로 분화되어 가는 것을 추적한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체제이념이 민족국가의 대내외적 원리로 체현되어 있을 경우를 체제이념의 대내외적 성격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1. 體制理念의 對內的 性格: 자유민주주의

가.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合一체로서 自由民主主義

(1)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갈등관계

절대주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17·18세기의

계몽주의는 자연법 사상에 입각하여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 자연법 사상과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은 市民階層은 개인의 내면적 주체성의 자각을 통하여 봉건적·신분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포함한 개인적 자유영역의 확장을 국가권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는 인권 선언으로서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에 明文化되었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는 프랑스혁명의 자유정신은 자유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지향함으로써 근대적 시민사회에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자유주의¹⁰⁰⁾ 사상의 주류가 되었다. 近代的 自由 개념은 정신적·정치적·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가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하면 국가는 가능하면 개인의 사적 영역에도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선택에 맡겨서 개인의 자기실현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더욱이 개인의 私的 領域에 대한 국가개입은 개인

100)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어원과 의미는 근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liberal」이라는 용어는 원래 스페인 언어로서 19세기 초 입헌정부를 옹호한 자유당(Liberales)이라는 정당명에서 유래되었다. 그 이후 자유주의 용어는 권위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를 옹호하는 정부, 정당, 정책, 정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노르베르트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11.

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 생명 및 안전 보장 등과 같은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된다.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근거에는 개인의 자유가 부여될 경우 인간의 이기심은 국가의 간섭없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조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豫定調和說이 깔려 있다. 예컨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에 의하면 국부의 증대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인간성향, 즉 이기심의 자연적인 결과이다.¹⁰¹⁾ 즉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실제로는 사회 전체이익을 촉진한다는 자유방임론(laisser-fair)에 입각하여 개인적 자유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농노제, 노예제, 계급적 특권 및 독점적인 길드 등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自由市場主義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정치적 자유가 자유확대의 선행조건이고 필수적인 보장이라는 이유에서 국가의 간섭을 제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자유주의에서는 인간 행동을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단한 발전을 통하여 自己實現을 도모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인위적인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 개인의 인격과 자발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며 파괴행위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당연한

101)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Modern Library, 1976) 참조.

논리상 귀결이다.¹⁰²⁾ 따라서 自由主義는 개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그 자신의 합당한 보호자라는 윤리적 전제하에서 국가에 의하여 어떤 보호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국가적 가부장주의를 배격한다.¹⁰³⁾

보비오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분명한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적 자유없는 政治的 自由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⁰⁴⁾ 그러나 사르토리는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따른 개인적 자유의 확보를 의미하는 반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야경국가로 표상되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즉 自由市場主義를 의미한다.¹⁰⁵⁾ 사르토리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상업주의,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등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선행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권력에 대한 정치적 자유주의가 도출되었다는 견해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 없는 政治的 自由主義는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

102) 노명식, 「자유주의」, p. 76.

103)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는 스스로를 통치할 조직을 결성한 개인들이 자기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줄 시민적 권력체(civil power)와 가부장주의적 통치, 즉 후견적 통치를 구별하고 있다.

104) 노르베르토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96.

105) 지오바니 사르토리,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II」, p. 510.

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아울러 법의 지배와 합헌적 국가를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크로체는 自由를 「정신의 순수한 범주」로 착안하여 절대권력을 규제하는 자유주의적 철학을 창안하였으나, 자유주의는 베네데토 크로체의 신이상주의적 재건, 네오마르크스주의 등의 철학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政治外的 自由 가운데 국가의 압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자유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내적 정신적 자유의 실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합헌주의적 국가를 통한 개인적 자유의 사법적 보호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역사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自由主義도 여러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1830년의 7월 혁명 이후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형성되었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사상을 크게 발전시켰으나,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질서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市民的 權利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재산 및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¹⁰⁶⁾ 고전적 자유주의는 기본적

106)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예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위와 재력의 차등을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불평등성

으로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古典的 自由主義는 참정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체제로서의 자유주의의 특징은 자기 변혁능력이다. 자유주의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정치적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부르조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당시 대두하기 시작한 민주주의 세력의 參政權 擴大 要求를 수용할 수 없었으나, 자유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인민주권사상은 참정권 확대 요구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¹⁰⁷⁾

자유주의가 구현된 국가는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권이 법에 의해 보호되면서 공권력의 행사는 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法治國家 (Rechtsstaat)로 지칭된다.¹⁰⁸⁾ 따라서 법치국가는 자의적이

으로 귀결시켰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부는 능력, 선견지명, 분별력, 창의력의 대가인 반면, 빈곤은 이러한 미덕이 없는 자에 대한 벌로 간주된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는 유산자들만이 통치의 유일한 책임자라는 것이 도출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참여를 제한하는 참정권의 제한은 정당화된다.

107) 미국의 북부 및 서부의 여러 주는 1830년대 모든 성년 남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서부 유럽의 노동자들의 투표권 요구는 19세기 말엽 대부분 수용되어 법앞에서의 평등과 더불어 성년 남자의 일반 투표권이 확립되었다.

108) 최소국가(minimal state)란 용어는 국가기능에 대한 한계를 의미할 때 사용된다. 노르베르트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p. 21~27.

고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남용과 탈법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하는 모든 헌법적인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통제·제한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自律性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국가는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는 다수 인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통치형태로서 권위주의나 과두주의 등의 독재적인 형태와는 상반되는 정치형태이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정책결정권 행사의 주체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대다수 성원에게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상으로 萬人の 支配形態(omnicracy)가 있으나, 만인의 지배형태로서 만장일치는 구성원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동질적인 집단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지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¹⁰⁹⁾ 따라서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選擇代案들이 주어져 있어야 하며, 여론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109) 루소는 진정한 민주주의(real democracy)의 4가지 전제조건으로서 인민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국가, 간단한 결정사안,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서의 상당정도의 평등 보장, 사치가 없거나 극소한 상태 등을 들고 있다. 노르베르트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112.

보장되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가 구현되는 등 실질적 여건도 조성되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 내내 상호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基本認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면 자유주의적 관념은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반면, 민주주의적 관념은 상호 조화론적이고 일원주의적이다. 자유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되더라도 개성의 신장을 선호하며, 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협애화시키더라도 共同體 利益의 발현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물론 자유와 평등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분할을 특징지우지만 자유주의가 자유만을 주장하고 민주주의가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정치적·사법적 평등을 주창하는 한편, 위로부터의 物質的 平等은 반대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귀족주의인데¹¹⁰⁾ 비해 민주주의는 평범한 질과 사랑을 확산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적 단결력과 분배적 평등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자유주의는 탁월성과 자연발생적인 것을 존중

110) 토크빌은 왕권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특권을 기초로 성립한 귀족적 자유를 평등을 실현하는 이념형으로 규정하였다. 귀족적 자유란 그 실제적 내용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그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토크빌은 사회 지도층으로 귀족들이 덕으로서의 자유를 자각하고 지방적·다원적 제권력을 확립하는 한편, 사회·정치적 힘을 기반으로 사회과정 및 정치과정을 조화롭게 진행시킨 측면을 부각시켰다. 노명식, 「자유주의」, p. 20 참조.

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民主化의 부산물로서 다수의 지배에 따른 국가간섭의 증대로 인한 개인적 자유의 협애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¹¹¹⁾ 반면,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과두주의와 증대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 개인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利益 概念(interest)을 인간행동의 지도적 원리로 만들었다. 이익개념은 행동원리로서 도입되어 열정(passion)의 파괴적인 경향이나 이성(reason)의 비효율성이 극복될 수 있다. 즉 이익지향적인 행위는 그 계산적인 성격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걱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감소시키는 한편, 격동적인 정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安定性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¹¹²⁾ 그러나 맥퍼슨에 의하면 자유주의에 기초한 「소유적 개인주의」는 인간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조형화시키는 所有的 市場社會를 만들어 낸다. 즉 그는 “소유적 시장사회는 시장관계가 모든 사회관계를 결정하므로 시장경제가 아니라 노동이 상품화되는 시장사회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¹³⁾

소유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는 평등보다는 개인

111) 위의 책, p. 29.

112) Albert O. Hirschman,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 44~48.

113)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Clarendon Press, 1962), p. 271.

적 자유를 선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평등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은 자유를 그 자체로서 보다는 物質的 福祉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애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번영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질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고 평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¹¹⁴⁾ 즉 자유는 분화와 분열에 의한 불평등을 낳는 반면, 平等은 평준화 및 집중화를 야기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갈등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2)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결합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에 따른 평등화 경향을 거부하고 일정한 불평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民主主義를 비난하였다. 반면, 토크빌은 산업화에 따른 재산, 지식,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기타 제조건의 평등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여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¹¹⁵⁾ 또한 데 루기에로, 켈센, 레이몽 아롱 등과 같

114) A.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1833-1840), pp. 71~72.

115) Ibid., pp. 47~54; 프랑스 대혁명은 국민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환기시켜 정치적 자유 및 평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평등화가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민주화에 따른 평등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은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관계를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결합체를 自由民主主義로 지칭하였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발전에 필요한 개인적 자유의 정도와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평등의 정도를 결합시키는 방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 처음 만난 이래 역사적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서로 충돌해 왔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同質化를 추구함으로써 자유의 핵심요소인 개체성을 파괴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개별화를 촉진시켜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¹¹⁶⁾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각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양자는 이율배반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다. 자유주의의 극단적 표현은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나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민주주의의 극단적 형태는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등 自由와 平等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희생없이 다른 한쪽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평등, 즉 적어도 기회의 평등이 없으면 자유는 사회갈등에 따른 배타성과 억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유는 평등의 원리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평등은 국가개입에 의한

116) 노르베르토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13.

無差別한 均等化를 야기하는 까닭에 결국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에 평등은 자유의 원리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¹¹⁷⁾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민주주의는 크게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절차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로 대별될 수 있다. 前者의 경우 평등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後者は 정치권력이 대다수의 시민들 사이에 효과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게임 규칙의 준수에 치중하고 있다.¹¹⁸⁾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간주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상은 자유의 이상으로 제시된다.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에서는 民主主義의 理想이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분리된다.

그러므로 폭넓은 평등이 없는 가운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117) 민주주의는 강압통치를 유발한 프랑스 혁명이 시사하듯이 인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민주적 전제」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독재가 공권력에 의한 자유의 강압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면 민주적 전제는 자유의 억압보다는 자유의 자발적인 포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즉 시민들이 평등이나 질서 등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노명식, 「자유주의」, p. 56 참조.

11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간의 갈등관계로 인해 대립적 관계에 있었으나, 우선 민주주의를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 예컨대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국민주권의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지칭한다.

확립된 자유주의적 국가와 권위주의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폭넓은 평등이 확립된 사회주의적 국가의 양극단이 존재할 수 있다. 節次上의 民主主義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국가의 단순한 형태일 뿐 추구해야 할 국가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절차상의 민주주의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서 經濟的 民主主義가 상이한 것이라는 주장은 형식논리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형태이지만,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복지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經濟的 民主主義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또한 경제적 민주주의도 정치적 민주주의 없이 기능할 수 없다. 이것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고전적 자유주의가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있으며, 경제적 평등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북한과 같은 현존사회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배제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節次上의 民主主義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한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민주주의적 요소에 비해 우월했고,

20세기에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자유주의적 요소에 비해 우월하였다. 그러나 체제의 自由主義的 要素를 파괴하고 그 대가로 민주주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자유로부터 평등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나, 평등으로부터 자유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통한 평등을 추구한다.¹¹⁹⁾

이러한 방법에 의해 自由民主主義의 구성부분을 나눌 경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평등 및 복지에 기본가치를 두는 사회·경제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구별은 보다 분명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정치외적 토대로서 민주적 사회를 만들하고자 하는 의도된 정책의 산물로 파악된다.¹²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와 평등 구현을 기본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自由民主主義라는 이념체제로 합치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절대적 자유의 체계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상을 평등의 이상과 재결합시키는 것이다.

119) 노르베르토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49; 자유주의와 양립가능한 평등의 개념은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적 평등 및 경제적 평등을 포괄하는 자유를 위한 권리로서의 평등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평등이란 재산 및 소득배분에 있어서 산술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물질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0) 지오바니 사르토리,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II」, p. 525 이하 참조.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自由放任의 이론과 실재를 공히 배척하는 민주적 자유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자유주의는 산업노동자들의 이익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추진함으로써 의무교육제의 도입, 노동운동의 합법화, 사회보장제도 정착 등 광범위한 평등을 가져오는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균형,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일 등으로 표현되는 自由民主主義는 다른 정치이념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최대로 실현된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적 자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소수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권위주의 형태를 지니는 등 중국에는 목표로 제시된 個人的 自由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의해 연결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원하고 사회주의는 자유없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¹²¹⁾ 사회주의는 개인적 자유의 제약과 아울러 민주주의의 反자유적 부분인 국가의 압제

121) 위의 책, p. 508;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형태인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체제이념 형태이지만, 그것을 제도적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앙집중적 성격으로 인한 비자유적 요인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를 내포하기 때문에¹²²⁾ 급기야는 평등의 이상도 파괴된다. 즉 국가권력을 통해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현존사회주의는 국가계급을 배태하는 등 국가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로서 實質的 民主主義도 구현하지 못한다. 평등의 완전한 추구는 자유는 물론 평등의 파괴로 귀결되고 자유의 완전한 추구 역시 평등은 물론 자유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 말로 현존하는 어떠한 체제 이념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政治 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운데 정치적 민주주의로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속성이 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핍된 채 평등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 민주주의로서 實質的 民主主義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계급의 대두와 결핍경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체제는 절차적 민주주

122) 토크빌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대한 과격한 호소, 사유재산 원리에 대한 과도한 공격, 자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의거한 사회주의는 산술적 배분원리에 의거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 나머지 반드시 집단주의적 절대권력을 낳게 되어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개인들을 국가권력에 예종시킨다. 노명식, 「자유주의」, p. 23 참조.

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현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社會·經濟的 統合過程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국가의 강제기능에 의존한다면 국가권력은 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사회의 재생산과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 평등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집중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평등의 구현을 추구하는 社會·經濟的 民主主義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나. 自由民主主義의 양대논리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국가권력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탄생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권력의 창설과 아울러 국가권력의 正當性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착될 수 있는 통치형태라고 정의할 경우,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성분 측면에서 보면 節次上의 民主主義를 의미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

의의 기본형태를 구성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기본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이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新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분리된다¹²³⁾ 즉 신자유주의는 절차상의 민주주의와 시장자유주의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양분된다.

그러므로 統一韓國의 體制理念으로 현존 사회주의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차적으로 배제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내부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인정하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상이한 시

123)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별한다면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이며, 사회민주주의는 진보주의이다. 원래 보수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혁명의 반대세력으로 탄생되었는 바,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이념적 지형으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에 대항하여 진보적 위치에 있었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비판받고 점차 보수주의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와 더불어 사회권의 확립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의 이념적 지주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진보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반면, 개인적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보수주의는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신자유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적 성향의 사회민주주의(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와 보수적 성향의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각을 보이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新자유주의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社會民主主義

산업발달에 따른 생활형태의 변화는 개인 행동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촉진시킴으로써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平等의 擴大를 가져왔다. 즉 인간은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사회적인 안정속에서 생활을 해야 정신적·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유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기대하던 이익의 조화와는 달리 자유시장·자유경쟁의 원리는 獨占企業의 등장으로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의 영역을 협소화시켜 경쟁원리가 훼손됨에 따라 자유 개념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론이 수정되고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수정되어 사회·경제적 안정을 국가가 보장해야 인간은 비로소 정신적·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自由 概念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자유개념의 탄생은 국민에게 생존을 배려하는 국가로서 「사회국가」의 성격을 지닌 현대국가 형태를 배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국가」는 국민의 개인적인 질병과 노후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며, 교육·취업·직업문제까지 간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이념으로 삼고 있는 거의 모든 서구국가에서 이른바 福祉

國家가 건설되었다. 즉 부의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빈곤의 절멸을 통한 국민소득의 균등분배를 의미하는 평등의 원리가 경제분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¹²⁴⁾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반을 두면서 정치·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左派的 發展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

(가) 社會民主主義의 이론적 기초

19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서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상호 결합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자의 노력 속에서 기본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社會民主主義는 독일에서 발전하였다. 1848년 혁명에서 독일의 의회민주주의 좌파가 정치적 좌절을 겪은 후, 1849년 초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하였는데, 그 당시 이 政黨의 성격은 소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과 노동 양극의 모순을 지양하지 않고 그들의 대립을 약화시키고 조화적 관계로 반전시키기 위해 민주·

124) 고전경제학자들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불안정이 부를 생산하는 기본동기라고 강조하였다. 반면 케인즈, 비버리지 등은 높은 임금과 완전고용에 유리한 입법조치 및 사회개혁으로 달성되는 경제적 안정이야말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극제라고 강조하였다. 전후 건설된 복지국가 는 고전학파의 공급위주 경제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케인즈의 총수요관리에 의거한 경제정책에 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공화주의적 제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¹²⁵⁾으로 축약된다.

라살레(Ferdinand Lassalles)의 주도하에 형성된 사회민주주의정당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民主主義 實現을 당의 기본강령으로 채택하였다.¹²⁶⁾ 라살레 사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사잡지 「사회민주주의자」(Sozialdemokraten)에서 라살레 추종자들과 같이 활동하다가, 1869년 립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 베벨(August Bebel)의 주도하에 「사회민주주의 노동자정당」(SDAP)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1875년 이 정당은 사회민주주의정당과 합당하여 당내 영향력을 배가시킨 결과, 독일 사회민주주의정당(SPD)은 經濟的으로는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극복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정당으로 그 기본노선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1880년대 유럽 사회주의운동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일개념으로 사용되어 개량주의 및 무정부주의와 대비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독일사회민주주의당은 1891년 설립된 제2차 인터내셔널에서 社會主義 革命目標를 위해 부르쥬아적 민주주의적 제도를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기본이념, 조직형태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럽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카우츠키(Karl Kautsky)주도하의 독일사회민주주

125) K. Marx/F. Engels, *MEW 13* (Berlin, 1977), p. 141.

126) 독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발전역사에 대해서는 W. 아이힐러, 이태영 역, 「독일 사회민주주의 100년」(서울: 중앙교육문화, 1989) 참조.

의당은 1899년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수정주의 노선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사회 계급 양극화론, 자본 집중화론 및 위기이론을 비판하였다. 임금노동자의 확대재생산에 의한 社會階級 兩極化論은 신중간층의 확대재생산때문에 그 적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자본집중론은 주식회사의 출현으로 인한 소유자 증가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붕괴론에 가까운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이론은 자본주의 발전 역사를 뒤돌아 볼 때 이미 극복되어 왔다고 베른슈타인은 주장하였다. 正統 마르크스主義의 이러한 이론적 맹점을 숙고할 경우 독일사회민주당은 혁명전략이 아니라 일반선거권의 기초하에서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추구하는 개혁주의적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를 둘러싼 노선투쟁은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의 강령과 서독의 경우 1959년 고데스베르그 大綱領의 채택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이 강령들은 혁명적 목표설정 및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의 궁극적 포기, 이념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¹²⁷⁾ 즉 제2차세계대전 후 사회민주주의의 노선은 개혁자본주의적이고 반공산주의적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변혁을 지향하는 개혁주의로부터

127) 위의 책, 참조.

改革資本主義로 기본노선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임금노동자를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한편, 당조직은 거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나 국가개입을 통한 조세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物質的 再生産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일반선거권의 쟁취, 정치적 자유 등 자유주의적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는데, 이 경우 국가의 위상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이며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날 경우 국가와 계급은 소멸할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극복될 것으로 보았다.¹²⁸⁾ 반면, 베른슈타인같은 수정주의자는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계급중립적이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동시에 수단과 목적이며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형태이고 사회주의를 쟁취하는 수단이다”¹²⁹⁾라고 파악하였다. 즉 베른슈타인은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를 부정하면서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유산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

128)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대해서는 E. Altvater / Kallscheuer, eds., *Den Staat Diskutieren* (Berlin, 1979) 참조.

129) E.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Reinbek, 1969), p. 110.

는 체제이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적인 정신을 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민주주의적 국가관은 국가를 계급으로 환원시키는 道具主義的 國家論에서 벗어나서 선진자본주의적 국가에 제도화되어 있는 교육, 노동, 보건 등의 정치·사회적 제권리가 부르조아 자본주의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즉 이러한 諸권리는 폴란차스(Nicos Poulantzas)에 의하면 사회 계급 및 분과간 역학관계의 표현으로 노동자계급 및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된 것으로 파악된다.¹³⁰⁾ 사회민주주의적 정치형태는 노동자계급 및 일반대중의 요구를 수동적·조합주의적·관료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국가에 制度化시키는 것으로 축약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일례로 대자본 및 제국주의의 도구, 의회민주주의적 개혁주의 등은 부정적 설명력을 잃게 되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논점의 중핵은 사유재산제도의 강렬한 옹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이었으나,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相補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정치권력의 평등한 배분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의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는 까닭에 자유주의에

130) N, Poulantzas, *Staatstheorie: Politischer Überbau, Ideologie, Sozialistische Demokratie* (Hamburg: VSA, 1978), p. 67.

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사회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참여의 질적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社會民主主義는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전체 경제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중앙집권적 계획 및 조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유화보다는 중요한 대규모 산업체, 시설, 교통체계를 포함하는 상당 부분의 재산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통하여 公共이 소유하게 하는 등 경제의 결정적 영역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즉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통한 사유재산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공재정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는 人本主義로서 경제체제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질 때 인플레이션, 실업 및 기아와 질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에는 상이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정당이 다수당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계층(노동자계급, 소시민층 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勞働者階級을 국가안으로 통합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서독의 경우 수출산업부문 노동자가 헤게모니블럭에 통합되어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체 종사자 등은 헤게모니블럭으로부터 이탈되어 국가의 물리적 강제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즉 사회민주주의 헤게모니 모델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국가의 同意機能이 강하고 서독의 경

우 동의기능과 강제기능이 동시에 행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개혁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 물질 토대가 강한 반면, 서독의 경우 대중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 케인즈主義와 복지국가

戰後 사회민주주의는 개혁자본주의적 정치형태를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개혁자본주의적 정치형태에 따르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양대 계급의 물질적 욕구는 높은 生産力 發展이 전제될 경우에 한하여 충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력 발전문제는 자본·노동 양대계급의 공통적 이해가 적용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문제는 公益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이에 대한 「기초적 동의」(Basiskonsens)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윤과 임금의 상호 대립되는 영합게임(zero-sum game)관계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분배문제는 兩大階級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대립적 요인인 분배문제는 완전고용, 생산력발전, 국민복지향상 등 경제정책에 의거, 계급간 이해의 조화 및 타협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계급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개혁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는 福祉國家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¹³¹⁾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정치형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비로소 케인즈혁명과 포오드주의(Fordism)라는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형태를 토대로 실현될 수 있었다. 케인즈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20세기 초 선진자본주의는 生産力 發展이 테일러주의·포오드주의의 기술도입으로 혁명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소상공품 생산업자와 3차산업 종사자가 산업예비군화하여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함에 따라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상승에 훨씬 못미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한 임노동자들의 비자본주의적·비산업적 소비·생활형태 등으로 말미암아 유효수요의 부족, 특히 소비재 수요부족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따라서 大量消費財産業은 발전할 수 없었다.

생산재부문의 기술혁신이 소비재부문으로 이전되어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에 의해 생산력이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축적위기는 케인즈혁명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정착된 포오드主義 蓄積樣式은 계급갈등의 조정을 제도화하여 임금법칙과 산업예비군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킴으로써 포오드주의 기술의 기초적 기술혁신에 의한

131) C. Buci-Glucksmann and G. Therborn, *Der sozialdemokratische Staat* (Hamburg: VSA, 1982), pp. 109~140 참조.

「가속화된 축적」을 가능케 하여 산업화에 의한 임노동관계를 일반화시켰다. 한편, 계급투쟁의 제도화에 따른 임금협상, 생산성 상승에 연계된 실질임금증가, 매개수단인 화폐를 통한 국가개입(보조금제도 및 소득의 재분배제도)을 통해 유효수요를 力動化시킴으로써 자본의 가치증식과정과 가치실현과정이 서로 연계되었다.¹³²⁾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민주주의는 처음으로 케인즈주의적 발전모델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안정화 논리와 사회개혁 논리를 결합시켜 그 전의 자가당착적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新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임금은 단순히 생산비용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거시경제모델에 의거할 경우 임금은 생산비용인 동시에 상품수요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금과 이윤의 상호 모순관계는 資本主義體制 유지를 위한 상호 보완관계로 바뀌어진다. 즉 소득재분배를 통한 개혁논리는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논리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 분배를 둘러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투쟁관계는 일정 한도내에서 양대계급의 소득분배가 조정됨으로써 타협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과거의 개혁주의적 사회민주주의는 新고전학파 경제이론과 마찬가지로 임금과 이윤은 항상 모순적 관계라는 입장에 의거하고 있었다. 즉 노동자계급이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면 임금수준의 향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의 복지수

132) K. Hübner, *Theorie der Regulation* (Berlin, 1989);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1991), pp. 66~82 참조.

준이 향상되는 반면, 자본가계급의 이윤은 고갈되어 결국 자본주의체제는 점차 국가의 주도하에 社會主義로 이행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국가가 계급간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갖출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의 총수요관리 정책에 의해 임금노동자의 후생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본축적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를 基本前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발전모델에 의하면 국가는 경제주체의 중심으로 등장하여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의 改革資本主義的政策을 통해 임금노동자의 생활 및 노동조건의 개선과 아울러 생활 및 소비구조를 혁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민주주의에서의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 또는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깊숙히 개입하는 「확대된 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단순히 사유재산권 보호, 치안 유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외적 방어 등의 자유주의적 국가기능만을 행사하지 않고 자본축적 측면에서의 경제정책은 물론, 진일보한 사회정책을 통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歴史的 妥協」을 도출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사회민주주의정당은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이로 인한 이윤을 상승 및 이윤의 확대 등을 통해 자본가계급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정당은 과거 보수당이

인민대중을 비조직화·원자화시켜 통치했던 지배체제구조를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와 소비구조 및 생활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인민대중의 積極的 同意를 획득하는 체제로 전환시켰다.

사회민주주의는 그람시(A. Gramsci)의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인민대중의 「능동적 혁명」이 아니라 「수동적 혁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인민대중의 체제변혁에 대한 욕구가 정치체제 상부로부터 체제개혁적인 방향으로 수용된 결과, 사회민주주의모델은 「受動的 革命」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인민대중의 (비)물질적 욕구가 개혁지향적 기술관료에 의하여 국가차원에서 충족되고 있으며 또한 포오드주의적 자본축적에도 국가의 경제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자본, 노동, 국가간의 사회조합주의적 방법에 입각하여 「國家中心的 改革主義」로 평가할 수 있다.¹³³⁾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는 복지국가에 그 기본이념이 구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복지국가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성을 유지한 채 사회주의와 무제한적인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의 양극단을 절충한 것으로서, 불완전하나마 인도적·진보적 사회의 한 유형을 표명한 것이다. 政治經濟史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탄생은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와 그 경쟁자인 사회주의 국가의 평등 이념이 상호 결합된 새로운

133) C. Buci-Glucksmann and G. Therborn, *Der sozialdemokratische Staat*, p. 133.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적 자유주의가 약화된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19세기 自由主義 思想은 대체로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자유경쟁 및 영리추구를 원칙으로 하는 사상이나, 그 후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업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국민의 복리 도모가 극히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自由放任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¹³⁴⁾에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여하려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수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혼합경제체제가 도입되고, 자유롭게 방치되었던 개인이 社會的 權利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을 약속하는 복지국가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던 것이었다.

福祉國家의 一般原理는 국가가 모든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킬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국가권력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경제적 제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수

134)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가 수반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는 바,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복지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는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법제국가로서 법률이 제권리를 수호하며, 諸은전이 권리로서 부여된다.¹³⁵⁾ 복지국가는 고용수준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규제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 소득보장, 의료 및 대인 서비스 등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권으로서 국민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集合的 責任意識의 구체적인 표현이다.¹³⁶⁾

그러나 복지국가 모형은 국가의 역할로서 최저생활보장과 완전고용을 강조하는 이념이지만, 최저생활수준과 범위의 계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완전고용정책이 고율의 인플레이션의 유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서구사회들은 사회복지 전개과정에서 實現性의 限界에 노정되어 있다.

(2) 新자유주의

(가) 社會民主主義의 위기와 新자유주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는 대다수 좌파이론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본축적을 가속화시켜서 장기적 호황을 구가하였는데, 이 시기의 사회발전 형태는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개혁자본주의로 지칭된다. 더욱이 社會民主主義는 1930년

135) Charles I. Schottland, ed., *The Welfare State* (N. Y.: Harper & Row, 1967), p. 10.

136)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p. 446.

대 파시즘, 보수적 자유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등과 같은 사회발전양식과 경쟁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우월한 사회발전양식이 체현되어 있는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발전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1920년대를 전후로 대량생산 및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勞動生産性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질임금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생산성 상승에 연계된 실질임금 증가,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경제개입(보조금제도, 확대재정정책, 소득재분배정책 등) 등의 政策手段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회발전양식은 임금노동자의 생활양식과 소비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야기, 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私的 領域인 사회에 대해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무한정한 발전을 보장하는 자유는 물론, 정치적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私的 領域에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개인적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 즉 경제영역에서 보다 많은 자유가 개인에게 부여되면 개인간 경쟁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보다 심화된다. 더욱이 社會的 不平等 構造가 온존된 채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경우 대다수 시민들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개선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평등과 자유는 자본주의에서 대립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국가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로 인해 발생했던 階級葛藤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일반선거권은 소수의 시민에게만 부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되었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政治的 平等은 존재할 수 없었다.

반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기반으로 임금노동자의 소비수준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가는 복지국가형태로서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개혁주의 또는 포오드주의로 지칭되는 社會發展樣式이 발생하였다. 포오드주의 발전양식에 의거하여 지배계층 및 집단은 피지배계층 및 집단으로부터 적극적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자본과 노동간에는 일정한 타협구조가 형성되는 등 시민계급의 헤게모니가 마침내 관철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당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민주주의는 물론 政治的 民主主義도 실현될 수 있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사간의 타협구조는 물론 전 사

회를 주도하는 동의를 체계가 개혁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구조나 지배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억압기능을 통해 시민사회가 지니고 있는 同意의 機能을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억압과 동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칭관계를 구성하며, 국가의 형태는 민주적 시민국가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포오드주의 자본축적양식은 민족국가 상호간의 생산조건이 資本의 競爭論理에 의하여 일반화되고 생산기술이 고갈되어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경쟁으로 인해 자본은 과잉축적되어 자본 집약도의 증가를 초래하고, 또한 자본생산성은 저하되어 이윤율이 저하되었다.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자본이 투자율을 낮춘 결과, 자본축적은 정체되어 축적위기가 전면에 나타났다.¹³⁷⁾ 이러한 포오드주의 蓄積樣式의 危機에 대응하여 新포오드주의 생산기술(전자산업, 유전공학 등)이 생산과정에 도입되었으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실업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복지국가는 마침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37) 1929년의 세계대위기는 유효수요부족으로 인한 위기였으나 1970년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자본이 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자본축적이 정체 또는 위기에 빠지는 생산력발전의 고갈에 의한 「생산력위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 자본축적 위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황병덕, 「전환기의 세계사회」(서울: 한울출판사, 1992), pp. 122~146 참조.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은 최소한 기초 기술혁신이 고갈되지 않아서 자본축적이 가속화되는 경우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축적위기에서는 福祉國家財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위기에 좌초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은 확대재정정책이 아니라 긴축정책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은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실질임금의 상승율을 저하시키고 사회복지비를 삭감시키는 등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총공급관리정책으로의 선회가 요구되었다. 즉 자본축적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결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자본과 노동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개혁정책은 폐기되고 國家政策은 자본주의 사회화의 중심축인 자본축적에 유리하게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케인즈주의적 措置國家, 사회국가로 표현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형태는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큰 시장, 작은 정부」 구호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보수주의 정당에게 국가권력을 이양하였다. 즉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은 기회균등의 확대, 사회복지의 확대, 사회·경제적 참여기회의 확대 등으로 자본주의사회를 변화시켰으나, 경제의 장기불황과 이로 인한 실업의 증대는 改革政策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¹³⁸⁾

138) J. Hoffmann, "Das Ende der Fahnenstange<< Sozialdemokratie und Keynesianischer Klassenkompromi in der BRD," *Prokla heft* 49 (1992) 참조.

서구의 현대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위기를 맞이하여 포오드주의에서 후기 포오드주의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있다. 1990년대에도 선진자본주의의 과잉축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더불어 그 모순이 세계시장에서 첨예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현재 포오드주의의 장기적 불황과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민족국가들은 세계市場의 영합게임(zero-sum game)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블럭화를 추구하고 있는 등 민족국가 상호간의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同意와 妥協의 헤게모니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사회의 정치화를 야기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과 신보수주의의 정치이론은 포오드주의의 발전위기를 반영하는 보수주의의 쌍생아 이념체계이다. 보수주의적 헤게모니의 담론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口號하에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반면, 시장의 자율기능을 확대시켜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신자유주의에 정당성과 국민 동의를 부여하는 신보수주의는 개인의 물질적 생활의 재생산을 사회 또는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는 개인, 가족, 이웃 등에 전가시켜 경제위기가 정치·사회위기로 擴大 再生産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포오드주의 발전위기에 봉착한 국가는 일면으로는 신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면으로는 사회갈

등 요인을 물리적 강제를 통해 통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적 저항에 봉착하여 점차 「權威主義的 民主主義」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경제 위기가 사회적 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민주주의도 위협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자본축적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완전고용을 추구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자본과 노동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은 그 실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본주의 사회화의 중심축인 資本蓄積에 유리하게 국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취하는 보수당에게 국가권력이 이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실업문제, 낮은 성장을, 날로 배가되는 보호무역주의 및 블럭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단지 독일 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당의 위기, 스웨덴 사민당의 정권교체 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成功可能性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신보수주의에 의한 정책 역시 「빈곤의 축적」만을 가져와 정권이 우파 케인즈주의적 정책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이전되기도 한다.

기술개발정책에의 국가지원 확대, 국가재정의 건전화, 비조직화로 인해 갈등표출이 어려운 실업자 및 사회적 주변부층에 대한 국가지원 감축, 경쟁력없는 산업에의 국가보조금 철폐, 교육·의료혜택에의 국가보조금 감축 등으로 표현되는 右派 케

인즈主義的 政策은 과거의 개혁정책의 폐해인 재정위기를 복지예산 및 산업보조금의 감축을 통해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완전고용 달성에 그 초점이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윤의 확대 → 투자의 증가 → 고용증가 → 완전고용으로 이어지는 순환형태가 이윤의 확대 → 고용감소 → 실업증대의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파 케인즈주의적 産業構造 調整政策은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즉 기업이윤의 증대를 통한 기술혁신은 공장자동화 등 「합리화」투자를 촉진시키는 형태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 케인즈주의적 정책은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장기불황국면은 기초기술혁신이 진척되어 장기호황국면으로 전환되고 개혁정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改革指向的 사회민주주의가 「국가이념」으로 등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판단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공존하였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도 그 발전위기가 보여주듯이 일정 시·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발전양식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는 분명히 자유와 복지가 상호 조화되면서 사회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체현되어 있는 發展樣式에서 찾을 수 있지만, 통일한국의 이념이 구현되어 있는 구체적 발전양식을 서구사회에서의 복지국가적 포오드주의라고 규정할 수 없다. 더욱이 통일후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념으로 사회

민주주의 이념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統一韓國의 體制理念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제가 모색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나) 新자유주의와 新보수주의의 基本論理

新자유주의적 사회·경제관은 보수주의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로 지칭된다. 그 기원이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¹³⁹⁾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보수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평등주의를 불신하는 한편,¹⁴⁰⁾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동원을 배척한다. 또한 보수주의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진보주의가 주창하고 있는 인간의 理性에 의한 合理的 計劃¹⁴¹⁾을 불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통제하기에는

139) Edmund Burke, rev. ed., *The Works of the Right Honorable Edmund Burke* (Boston: Little, Brown, 1865).

140) 예컨대 버크는 현대보수주의의 한 요소인 사유재산을 변호하면서 능력과 재산 모두 물려받은 불평등이라고 지적한다.

141) 진보주의자들은 문제 해결책을 고안하려는 인간이성을 신뢰하여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성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신뢰감은 진보주의의 핵심을 구성한다.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우리 운명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계획에 의한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서 역사와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만 타우워 샤르젠트,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p. 185 참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점은 변화의 정도이지 변화의 종류에 관한 것은 아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더 많은 변화를 원하고 이성에 의한 사회적 실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들은 이런 것이 오직 현존의 정치적·법적·경제적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급진주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합리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무조건 理性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과거세대의 축적된 지식을 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통을 보다 신뢰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극적인 변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화에도 주저한다. 즉 “보수주의는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¹⁴²⁾ 보수주의는 변화를 저지하고 사회적 실험을 우려하는데, 이는 기존 가치들이 미지의 가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保守主義는 인간 개개인의 우월성과 열등함을 인정함으로써 계급, 지성적 능력, 국적, 인종 등 인간 사이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¹⁴³⁾ 따라서 보수주의에서 볼 때 정부를 통한 생활조건 개선 기도는 자립정신의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정부가 관여하면 그 자질에 손상을 입게 되며, 貧者는 정부의 도움으로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¹⁴⁴⁾

하이에크(F. A. Hayek)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등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新자유주의¹⁴⁵⁾는 사유재산제, 법적

142) Jay A. Sigler, "Introduction," *The conservative Tradition in American Thought* (New York: Capricorn Books, 1969), p. 13.

143) Ibid., p. 13.

144) Russell Kirk, "Prescription, Authority, and Ordered Freedom," in Frank S. Meyer ed., *What is Conservatism?*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4), p. 24 참조.

145)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

제한이 없는 재산축적,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동력으로서의 이윤추구 등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또한 보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自然發生的 市場秩序의 원리를 자유주의적 사회원리로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정의 실현의 방편으로 시행되는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시장질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극히 最小限의 權限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며 정의, 평화, 자유의 이상은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질서의 원리가 확대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자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經濟的 自由의 달성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 기능이 작동되면 상호간의 이익은 증진된다. 그런데 시장기능은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간여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체제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정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Kegan Paul, 1960);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참조.

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자발적 활동 영역인 市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여 개인적 자유가 보장된다.¹⁴⁶⁾

하이에크에 의하면 개인적 자유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반면, 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간의 相關性을 역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이었던 경제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정치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프리드만은 자본주의가 어떤 체제보다도 더욱 더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켜 준다고 역설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직접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조직, 예컨대 競爭的 資本主義는 경제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경제력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더욱 신장시켜 준다고 주장한다.¹⁴⁷⁾ 이러한 관점은 경제력과 정치권력이 서로 분리되어 견제하게 만드는 일종의 견제균형론에 비견될 수 있다. 즉 이것은 경제력이 분산되어 상호 견제되는 동시에 정부에 의해서도 규제되는 한편, 그 정부는 定期的 選舉를 통해 시민에 의해 규제되는 장치를 의미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와 권리의 소유자로서 전제된다.

146)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참조.

147) *Ibid.*, p. 9.

모든 정치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리는 소극적 자유의 영역을 가장 확대해야 하며, 최상의 自由主義 社會는 자유가 최대한으로 허용되고 권력은 최소한으로 규제되는 사회로 이해된다. 자유주의는 다수의 권력을 포함하는 모든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정부의 권력에 대한 통제를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이며,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상의 차이는 분명해진다.¹⁴⁸⁾

新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代議民主主義를 지지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지배의 자의적이고도 압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대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동태성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 규칙을 통해 인민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大衆民主主義的인 다수의 지배가 항상 합리적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성취할 수 있는 권리에 입각하여 국가활동의 한계를 규정할 경우, 시민들은 자신의 견해와 기호를 개발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등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할 경우, 법치적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個人的 自由를 고양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의 노력과 자원

148) 노르베르트 보비오,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p. 98.

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⁴⁹⁾

하이예크의 견해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라는 최고의 정치적 목적을 보장하는 公利的 裝置를 의미한다.¹⁵⁰⁾ 따라서 법의 지배는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의 존중에 기본가치를 둔다. 하이예크의 법치적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자유시장과 최소국가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법치적 민주주의의 질서는 자유방임적 질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新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개입은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있도록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반적 규칙들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것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市場經濟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토대이며, 정부의 의사결정체계로서의 정치체제는 경제체제로서의 시장과 비교할 때 항상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선택

149) F. A. Hayek, *The Road to Serfdom*, p. 11; 자유주의국가는 국가의 권력과 기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절대국가의 원리와 상충되고, 또한 사회에 대한 통제를 공동선의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는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의 원리와도 상반된다. 민주주의적 자유주의국가, 즉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국가의 절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제권리를 옹호하는 법치국가이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최소국가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국가, 즉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는 최소주의 국가이되 비법치국가, 예컨대 홉즈의 리바이어던처럼 국가는 절대권력을 지녔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국가이다. 반면 사회국가는 국가개입이 증대된 개입국가이나 국민의 체권리가 보장되는 법치국가이다.

150) Ibid., pp. 62~63.

체계로 이해된다.

또한 新자유주의는 공동 목적 및 사회적 선이라는 명목하에 사회를 기획·규제하려는 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한다. 개인의 삶과 활동들을 규제하는 국가개입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는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들이 일치할 수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個人的目的이 사회적 목적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¹⁾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관점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국가의 행위 범위를 제한하고 국가권력을 고양시키는 「강력한 국가」 또는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최소국가」의 명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¹⁵²⁾ 最小國家는 타인의 도움을 강요하는 자원의 재분배와 세부적인 계획과는 양립할 수 없다. 국가가 기회 및 결과에 있어서 평등을 증대시키는 도구로 봉사할 때 그 자신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보호적 활동을 주로 자신의 핵심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부터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유의 개념을 個人的自由의 擴大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에 대한 간섭을 가능한 한 줄이고 개인의

151) Ibid., p. 45.

152) Ibid., pp. 60~61.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 상실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활동을 축소·수정하고 개인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는 국가의 업무수행과 공공지출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촉진한다.

신자유주의는 自由市場經濟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면서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 위기를 국가의 과도한 지출, 즉 국가의 개입 증대에서 찾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경쟁적 민주주의가 복지국가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경쟁적 민주주의하에서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여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촉진하였기 때문이다.¹⁵³⁾ 따라서 福祉國家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개입이 줄어든 자유시장체제가 케인즈주의를 대체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 복지국가는 사회적 과정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권력이 비대해진 반면, 국민의 자유 영역은 상대적으로 너무 협소해졌다고 신자유주의는 주장한다. 따라서 新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 계발과 자아 실현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자유의

153) 「과부하정부 이론」에 대해서는 S. Brittan, "The economic contradictions of democrac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 (1), (1975); W. D. Nordhaus,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1975) 참조.

개념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사회 복지 이념을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기 규제적이지 못하다는 확신 속에서 市場經濟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도 사회복지가 자선이 아닌 개인의 권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전향적인 사회복지 이념은 서구사회의 역사를 개인의 권리개념의 확대, 사회권의 시각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進步的인 사회복지 개념을 비판하여 사회복지도 보편적 원칙이 아닌 잔여적 원칙에 입각하여 수혜자의 수를 제한하고 가족이나 자발적인 민간기관에 사회복지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⁴⁾ 신자유주의적 정책 중 특히 사회정책 부문에서 目標로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민영화, 불평등의 장려 등으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약과 합의에 있어서는 개별적 선택을 강조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는 빈곤

154)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해서는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p. 202;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p 175 참조;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유형은 자유방임주의의 이념에 따라 사회의 현상유지, 자율적 인간,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지, 경쟁적 사적시장, 불평등을 기본가치로 지니고 있는 바, 이론가로서는 하이에크, 프리드만, 노직, 랜드 등을 들 수 있으며, 노직과 랜드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에 비해 매우 강한 보수주의적 이론가로 평가되고 있다.

을 상대적 개념보다는 絶對的 概念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생활 수준이 기초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잔여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족, 교회 및 시장 체계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제도이고 社會福祉는 이같은 제도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 自由民主主義의 실천기제

(1) 社會民主主義와 新자유주의의 문제점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의거한 시장의 실패와 시장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기구로서 國家를 등장시키고 있다. 국가는 다른 사회조직과는 달리 「정당성있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능력이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시장 기능이 수행할 수 없는 평등의 실현 문제, 즉 재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非市場的 機構로서 국가를 등장시키게 된다.

사회민주주의에 따르면 자유방임주의는 자본주의체제 기반을 파괴하여 결국은 개인주의와 자유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소수가 독점을 통해 경제를 통제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정부마저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결국 民主主義的 資本主義體制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독점자본가들

의 정부 통제를 들 수 있다. 그러한 통제는 정치적 정책결정에 다수가 참여하는 장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自由市場의 파괴와 권력집중에 집중된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의한 정치·경제권력 집중은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보다 좀 완화된 비판에서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할 지라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체제에서 個人的自由는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는 거대관료제를 통해 작동된다. 그러나 거대관료제는 사회민주주의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공적 통제장치의 진정한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료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부는 官僚制의 非效率性을 교정시켜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기적 이익추구라는 사적인 악을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공적인 덕성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국가의 「보이는 손」이 시장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국가 경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利己的인 存在가 아니라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타적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이기적인 행위자로 가정하면서 국가 경영자들은 이타적인 행위자로 가정하는 것

은 극히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영자들도 시장 개입 또는 예산의 극대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행위자로 간주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前자본주의에서 현대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항상 公共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¹⁵⁵⁾

케인즈주의하의 성장은 합리적 투자로 인해 대량실업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원칙들과 자본주의 시장과의 격심한 긴장을 야기한다.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실업을 감소시키며 社會福祉의 증대를 가져오리라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량실업을 유발하는 경제성장은 복지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가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한편, 관료적이고 억압적이기까지 한 국가정책을 극적으로 표현한다.¹⁵⁶⁾ 新자유주의는 국가를 최소국가(minimal state)로 정의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를 절대악으로 판단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필요악으로

155) 현존사회주의 실패의 상당 부분이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계급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의 제세력이 국가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컬어지는 국가의 도구화 경향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국가의 편파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56)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정책이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업문제는 현대자본주의가 기술발전의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풀려질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pp. 128~132 참조.

간주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국가야말로 강제력의 행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는 조직으로서 最小限의 정치적 간섭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회내의 각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自由市場經濟를 옹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제도를 자기규제적이고 자기수정적이며 자기충족적 기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완전하고 경쟁적이며 균형상태에 있을 경우 자원배분은 최적이 되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익추구라는 私的인 惡이 시장의 힘에 의해 공적인 덕성으로 화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하이예크의 시장자본주의 모델은 현대의 조합주의적 자본주의체계를 비판하지만, 자유시장경제체계가 권력과 자원의 현저한 비대칭적 배분을 체계적으로 再生産한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 시장은 불완전경쟁이 지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더 근본적인 윤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관련, 신자유주의는 경제권력의 비대칭적 배분현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自由市場의 현실은 오늘날 복잡한 시장정보, 소수독점과 일인독점구조, 기업권력과 다국적 기업체제 등의 경

제관계로 점철되어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하려면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개인과 시장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私的所有를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하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선택 능력은 자신 소유 재산에 비례하여 행사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일인일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인적 소비능력의 격차는 물론 투자의 사적 선택 및 통제는 시민들의 集團的 選擇을 제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서로 유리되는 등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시장자본주의의 특징인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민주적 경쟁과정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폐해에 노정되어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존의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계급·계층 및 여러 인종간의 관계가 自由와 平等의 기본가치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상태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⁷⁾ 국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불가피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공권

157) C. Pateman, *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A Critique of Liber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1985), p. 171.

력의 성격과 더불어 국가행위의 범위 및 한계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自由市場을 옹호하려는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국가의 등장(rolling back the state)은 신자유주의가 내걸고 있는 반관료적·반위계적·반권위주의적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극빈자, 무능력자, 취약자를 보호하였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감소하여 이들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경우 법과 질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한다. 이는 그러한 정책들이 불러 일으키는 불가피한 저항을 權威主義的 手段에 의거하여 부분적으로 봉쇄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⁵⁸⁾

계급·계층간, 문화간, 남녀간, 지역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개인의 취미, 견해, 재능과 목적 등을 개발하는 자유는 실현할 수 없다. 근대의 주요운동 뒤에는 시민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현대사회에 와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권리 및 생태계 보호문제 등 자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대두됨으로써 民主主義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¹⁵⁹⁾ 일차적 욕구의 상당부분이 보장되어 있는 후기 물질사회에서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선택에 의해 규정되는 욕구의 자유로 대체되었다. 다양한 문화적 차원의 욕구

158) 데이비드 웰드, 이정식 옮김, 「민주주의의 모델」, p. 283.

159) 알베르토 멜루치, “일상생활의 민주화,” 한상진 편저,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1), p. 333 참조.

가 일차적인 물질적 욕구를 대체하여 산업사회의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인)의 특징인 소유의 자유는 보다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권리인 存在의 자유로 대체되었다. 모든 근대혁명이 기치로 든 평등권은 선택에 따라 차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들이 자유를 구가한다는 것은 법앞의 평등을 구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행동 방식 가운데 물질적·문화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⁰⁾ 따라서 자유에 대한 평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 속에서 유형적이고 실행될 수 있는 積極的 自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해 볼 때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내부의 분과인 사회민주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 설정할 수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관료화를 통한 權力의 集中性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기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후 후유증,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한 정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기체에 의한 경제권력의 집중화 및 불평등구조의 악화를 야기시킬 것이므로 통일한국

160)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론의 현대적 분화: 제3의 길을 향해,” 『현대 민주주의론』, 사회와 사상 (1991년 겨울), p. 21.

의 이념체계로는 부적합하며, 통합과정에서의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2) 國家와 市民社會의 이중적 민주화

신자유주의는 국가주의적 평등을 소극적 자유로 대치하여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간섭의 축소와 자유시장 원칙의 확대 적용을 주장한다.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경시하면서 평등을 부여하는 巨大國家 概念에 매달리기 때문에 평등을 창출하는 국가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적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이 재화의 효율적 생산과 분배에 필수적이라고 강변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한적으로 조정된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고 또한 自由市場보다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의문시하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는 경제권력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주권적 민주국가, 권력중심부의 다양성 및 다원성 등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논리는 市場을 비권력적 체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는 시장 폐해의 분석을 등한시하고 있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을 경제권력으로 환원시켜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의 위험성과 정치적 책임문제를 간과했다. 국가권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독립된 권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을 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시민들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면 經濟·社會的 不平等을 양산하는 원심력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경제권력의 본질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과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견해는 거부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는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좌파이론이나 신 자유주의의 경우 계층, 종족, 성별, 지역간 갈등 등 사회관계의 다양한 분화를 이해조정을 의미하는 「政治」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 전통에서 정치란 정부제도의 영역 또는 정부 자체의 활동과 동일시된다. 이에 비해 사회민주주의에서 정치란 經濟權力 問題의 해결로 간주하여 특정 유형문제를 정치로부터 배제한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불명확하다. 이는 단일 행위자로서 국가는 위로는 초국가적 관계의 체제로 대체되었고, 아래로는 다양한 국지적 통치체, 즉 고유의 대의 체계와 결정체계를 가지고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을 결합시킨 일련의 複合的 組織體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의 소지자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정치란 사회적 삶의 생산 및 재산과 관련된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규제하고 사회 문제의 발생 및 集合的 解決方式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주체는 국가 및 경제권력의 소지자로 제

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관계의 당사자로 확대된다.

인간적 삶의 보편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정치를 이해한다면 정치현상이 벌어지는 국가와 시민사회는 시민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二重的 民主化는 권위주의적 정치형태가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의 지방 및 계층적 특수이익을 일반이익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성격이 노정되었고,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자발적 협조체제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 내부에서 특정계층 및 지방이익이 집중 투영됨으로써 社會的 關係가 갈등관계에 있는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구조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배계층, 특정지역 출신 상층부, 정치인 및 국가관료 등 정치적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는 깊은 갈등구조가 놓여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政治·社會構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장내의 정치, 여성운동, 생태계 보호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적 자본과 국가가 지닌 권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잔존해 있는 지역갈등, 성적 권력 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더욱이 시민들이 동등한 권력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社會的 公共部門에서 집단행동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항시적 견제자로 기능하는 가운데 자치노조, 독립적 통신매체, 정부정책 감시단체, 여성단체 등과 같은 사회조직들은 그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국에서 市民社會의 民主化는 국가의 지속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파악되지 않고, 오히려 의사형성의 중앙집중화와 다수의 결의 속에 나타난 일반이익의 관철을 위한 구조로 이해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公共에 공개할수록,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수록, 의견과 반대의견의 제시가 자유로울수록 권력남용의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사회적 정당성」과 「더 많은 민주주의」의 확보야말로 국가의 민주화의 정책방향을 나타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 國家의 民主化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독재로 시민사회가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대의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만일 국가가 대중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경우, 일면으로는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고, 다른 면으로는 조직화된 대중을 통하여 의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大衆民主主義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대중과 민주적 기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대의민주주의적 관계가 아니라, 대중이 공공생활에 있어서 직접적 정치참여도를 증진하게끔 정당, 노동조합, 대중운동, 기층조직 등의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 정당의 차원에서는 基層組織이 민주주의기구에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획·행정기구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임금투쟁 및 노동조건향상의 향상, 투자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화된 국가는 市民社會의 調整者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범한 사회적 행위자와 집합들의 이해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와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규범과 규칙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삶의 시·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부응하여 개인의 동기구조를 사회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통제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민주화로 표현되는 二重的 民主化過程¹⁶¹⁾에는 자기의식적으로 사유하는 인간능력을 의미하는 「자율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율성의 원칙」은 헬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개인은 자기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즉 개인은 자신에게 유용한 기회를 산출하고 제약하는 틀을 규정

161) 데이비드 헬드, 이정식 옮김, 「민주주의의 모델」 참조.

하는 데 있어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 틀을 사용하지 않는 한 평등한 권리(그리고 따라서 평등한 복종의무)를 누려야 한다.”¹⁶²⁾ 무엇보다도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 확산과정으로 이해되는 자율성은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본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특질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社會的 平等과 自由가 확산되어져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남북한은 물론 통일한국에서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주체가 시민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의 확장은 參與民主主義¹⁶³⁾ 주장하는 것처럼 무제한적 참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 옹호자들은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조합주의 등이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료들로부터 권력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민주주의 주창자들은 代議制를 완전히 반대하지 않으면서 오직 철저하게 확대된 참여만이 민주주의의

162) 위의 책, p. 253.

163) 참여민주주의는 우파의 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되는 신좌파의 주요모델이다. 신좌파는 주로 60년대의 정치적 대격변과 좌파내의 논쟁, 정치이론, 자유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유산에 대한 불만으로 등장하였다.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여타 원리들도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역설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시민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변모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게 만드는 작업에 시민들이 확고하게 개입하지 않는 한 시민들은 결코 자유롭거나 정치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

參與民主主義는 집단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대중들의 권력중심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한편, 국가의 일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는 적극적이면서도 통찰력있는 시민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원리를 사회와 국가의 組織構造에 결부시켜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 분배의 문제(사회정의 문제) 및 민주적 과정 사이의 매우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개인적 자유, 집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민주주의는 集合的 意思決定을 강조하는 등 민주주의를 다른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인적 자유 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은 민주주의적 타협의 조류 속에 방기한다. 참여민주주의는 정의롭고 긍정적인 정치적 결과의 산출에 민주적 이성, 즉 현명하고 선한 민주적 의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 분배의 문제(사회정의 문제) 및 민주적 과정 사이에는 복잡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政治的 參與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은 제한되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 모델이 충분히 옹호되려면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민주적·집합적 기제의 한계가 거론되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自由主義의 基本敎理, 즉 공권력의 비인격적 구조의 중심성, 권력중심의 다양성, 대안적 정치적 강령 사이의 경쟁과 토론을 촉진하는 메카니즘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사회를 대체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전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市民社會를 구속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사적·자발적 조직으로 구성되는 사회영역, 예컨대 가정, 경제영역, 문화적 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되는 반면, 국가는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권리를 실행하며, 신정책을 조정하고 특정한 이해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을 조정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파악해야 한다.¹⁶⁴⁾ 더욱이 의회와 정당체제를 포함하는 代議制 選舉制度는 이러한 활동에 권위를 부여하고 조정하는 불가피한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을 제시할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를 통한 시민적 참여가 의미하는 바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164) 다원주의 체계에서 시민권과 참여가 확대된 반면, 관료적 행정조직을 통해 전체사회를 계획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개인과 집단의 권리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해와 결정의 다원성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그러나 계획의 과정은 불가피하게 참여와 권리를 축소시키는 테크노크라트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의미에서 「參與的 自由民主主義」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으로 제시된 「참여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제거해서는 안되며, 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국가와 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는 生産手段의 社會化가 사회조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 그 보다는 민주주의적 의사형성과정과 결정과정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문제가 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즉 법앞의 평등, 표현의 자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은 自由主義에서는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더욱이 국가와 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는 정치적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경제적 정책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그들이 선출하는 정부를 통하여 자신들의 經濟的 未來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회계층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성, 성별 차별, 계층 및 지방간의 갈등 등은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구조를 반영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는 모두를 위한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지만, 機會均等의 확보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사회주의가 의도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국가화」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하에 모든 인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는 일이다.

韓國社會에서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유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집단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지만, 자기성찰적 정체성이 형성·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통제와 억압이 없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는 행정제도, 당체계 및 국가구조와는 별도로 공공영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公共領域은 정치적 제도와 집합적 요구, 행정적 기능과 사회적 갈등을 연결하는 지점으로서 지식의 전유와 상징적 자원의 생산을 보장하면서 개방적으로 정보가 순환되고 조정되어 개별적·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연성의 제도체계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정치적 권력과 일상생활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 이중성, 즉 代議와 參與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민주화가 추진될 경우 국가권력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의 해방을 달성하려는 고전적인 무정부주의와 시민사회의 권력을 폐기하고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북한과 같은 國家社會主義의 함정이 피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시민사회를 대체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거부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되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절대우위가 확보됨과 동시에, 통일후 통합과정에서의 각종 갈등형태가 국가 뿐만 아니라 市民社會에

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통합 기제를 형성하여 통일후유 증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통일 이후 발생할 남북간의 지역갈등은 현재의 지역갈등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民主化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3) 국가와 사회의 組織原理로서의 결사체 모델

통일과정 및 통일후 통합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을 촉진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結合形態가 주요문제로 대두된다. 국가는 주어진 영토내에서 인민에 대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정당하게 독점할 수 있는 강제적 조직이다.¹⁶⁵⁾ 헤겔은 시민사회를 일차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개인적 욕구 충족 및 욕망의 매개를 행하는 욕구의 체제로 정의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市民社會에 대한 헤겔의 개념, 요컨대 ‘욕구의 체제’의 개념을 사용하고 이러한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해부는 정치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는 헤겔에서의 다양한 생활관계를 맺는 社會的 存在로부터 다른 사회적 관계가 사상되고 단지 경제적 범주로서 계급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그람시는 경제적 구조와 법 제정, 강제력을 가진 국가

165) M.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J. C. B. Mohr, 1972), p. 30.

사이에는 시민사회(società civile)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헤겔로부터 기타 사회단체의 조직 등을 자신의 고찰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람시는 市民社會(società civile)를 “일반적으로 私라고 칭해지는 모든 기구”로 표현된다. 요컨대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교육기관, 정당, 노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 조직 및 구조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생활영역, 예컨대 가정생활, 경제 영역, 문화활동 등으로 정의된다.¹⁶⁶⁾ 부정적으로 정의할 때 시민사회는 공적 영역으로서 국가가 아닌 모든 私的 領域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동일한 조직원리에 따라 형성된 단일체가 아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질서의 조직방법은 공동체, 시장, 국가 등의 다양한 모형이 있을 수 있다. 共同體的 組織方式의 기본특징은 자발적 연대이며, 시장적 특징은 분산적 경쟁이고, 국가주의적 특징은 위계적 통제이다. 공동체적 질서내에서 사회적 선택의 합리성의 기준은 정체성의 확인에 있으며, 시장 질서내에서는 구성원 선호의 극대화에 있고 국가적 질서하에서는 위험부담의 최소화와 예측가능성의 극대화에 있다.¹⁶⁷⁾

166) Ibid., p. 212.

167) 이에 대해서는 Wolfgang Streek & P. C. Schmitter, eds., *Private Interest Government: Beyond Market and State* (London: Sage,

역사적으로 社會秩序를 고찰해 볼 때, 이 세가지 사회질서의 조직원리중의 하나가 우세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배타적으로 다른 기본조직을 지배한 적은 없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共同體的 組織原理는 쇠퇴하고 시장적 질서와 국가주의적 질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가 사회질서를 구성해 왔던 것이다. 시장과 국가 모두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기구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념형적인 국가주의나 시장주의가 지배한 적이 없으며, 사회내에서 두 조직원리가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체제가 결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공동체, 시장, 국가라는 사회질서 構成組織 가운데 특정 기본조직이 지배적인 사회질서의 조직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공동체모델, 시장모델, 국가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¹⁶⁸⁾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를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남한은 시장모델과 국가모델이 혼합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모델이 우위를 점한 國家的 市場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산업화가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원리가 잔존한 채 사회주의적 조직원리에 따라 국가주의가 절

1985), p. 5; 임혁백,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제,” 한국사회학회·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p. 382~383 참조.

168) Wolfgang Sreek and Philippe Schmitter, “Community, Market, State and Association?: The Prospective Contribution of Interestovernance to Social Order” 참조.

대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적 국가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사회질서 원리로서 남한의 국가적 시장모델이나 북한의 共同體的 國家모델을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서 시장모델이나 사회주의적 이념형으로서 국가모델로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시장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위계적 통제를 축으로 하는 국가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통하여 통일한국 성원들의 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방법으로 「組織的 協助」의 조직원리를 바탕으로 교섭을 통한 이익조직간의 조정과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 결사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¹⁶⁹⁾

사회조직간의 협조에 근거한 결사체모형은 공동체모형, 시장모형 또는 국가모형을 완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결사체모형은 국가적 강제, 시장적 경쟁, 공동체적 자발성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선택적으로 취하려는 「混合政體」이다. 개인이 최소한의 공동성을 기반으로 최대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모형이라면, 원자적이고 비사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장모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를 강조하는 국가모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結社體模型은 시장적 경쟁을 축으로 하면서도 시장관계를 대립관

169) Ibid., p. 32.

계가 아닌 자발적 협력관계로 대치함으로써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전체를 축으로 하는 국가주의와의 대립관계를 상호 의존관계로 만든다. 결사체모형은 自發的 協調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로서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간의 모순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념체계이다.

조합주의는 흔히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로 구분된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로부터 이익단체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익집단 조직의 자발적 협동과 조정을 존중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신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 구성단위는 제한된 수의 위계적·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들로 이루어지며, 단일적이고 강제적이며 비경쟁적인 특성을 갖는다. 신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 협상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각개의 獨自的 代表性을 확보한다.¹⁷⁰⁾ 반면, 國家組合主義는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위로부터의 정치적 권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조합주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선진자본주의의 민주적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며, 국가조합주의는 과거 파시즘의 경우나 후진 자본주의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¹⁷¹⁾ 그러

170) Philippe C. Schmitter,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36, no. 1, (Jan, 1974), pp. 93~94.

171) Philippe C. Schmitter & G.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pp. 20~22; 조합주의의 기준은 국가에 의해 이해관계 조직에 제공되는 자원의 정도, 이익집단이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대표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 조직의 간부와 일반 회원간의 내부적 관계가 조정되는 정도 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므로 통일한국의 이념체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노동부문을 배제하는 權威主義 形態의 국가 조합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조정 및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조합주의 또는 新조합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오도넬(G. A. O'Donnel)은 조합주의란 사회를 국가와 연결하는 일련의 구조로 정의하고 조합주의적 구조를 지역단위가 아닌 기능적 조직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구조로 파악한다.¹⁷²⁾ 말로이(James M. Malloy) 역시 조합주의를 사회와 국가의 조직 유형으로서 국가와 기능집단간의 接合類型으로 이해한다.¹⁷³⁾ 조합주의는 다원주의¹⁷⁴⁾와 달리 이익집단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정부관료제와 효과적으로 권력을 공유한다고 지적한다. 이익집단들은 정부와 정책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수행과정

172) G. A. O'Donnel, "Corporatism and the Question of the State," in James M. Malloy, ed., *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7), pp. 47~49.

173) James M. Malloy, ed., *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pp. 4~17.

174) 다원주의 옹호자들은 부, 인종, 성별, 민족, 직업, 종교 등과 같은 사회 내 다양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는 대부분 현대사회의 기초조직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언제나 타집단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의해 견제되며, 정책결정은 이익집단들의 경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원주의 옹호자들은 다원주의가 과도한 권력집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익들의 표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체제라고 주장한다.

에 통합된다. 즉 “조합주의는 사회적 노동분화로 인해 발생한 이익조직들과 국가기구와의 정책협상을 의미하는 바, 거기에서 동의된 정책은 이익조직체들이 그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통하여 집행된다.”¹⁷⁵⁾ 따라서 組合主義는 이익단체들의 사적 이익정부간의 협상 및 국가와의 협상을 의미하는 이익조정과정과 아울러 자발적 협동에 근거한 실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조합주의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적 원리는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 제이익집단이 집중화된 조직을 갖춤으로써 상호 인정을 통한 협상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기제이다. 즉 이익집단의 中央集中化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등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수평적 사회구조를 기능적 조직으로 통합하여 상호의존적 계급협동이 사회조직의 중심원리가 되도록 社會構造를 수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⁶⁾ 그러므로 조합주의는 기업

175) Wyn Grant,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ism*, pp. 3~4.

176) 슈미터에 따르면 다원주의 사회의 이익집단들은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그 수가 많고 다른 집단과 수평적 관계를 지니면서 경제적 상호작용을 한다. 반면, 조합주의 사회의 이익집단들은 집단의 통제하에 형성되며 수직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수직적 계층화하에서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지닌다. Philippe C. Schmitter, & G.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p. 97.

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의 관계가 상호 인정과 협동에 근거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을 이룬다.¹⁷⁷⁾

이와 같이 결사체의 自發的 組織化를 통한 이익집단의 집중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구조가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권력구조의 유연성은 국가가 공식적 정책 이외에도 결사체 모형에 입각한 이익집단 조직의 대표들과 정부대표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완전고용, 임금, 물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현안문제를 협의·결정함으로써 私的 利益團體에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조합주의에서는 권력구조의 유연성을 통해 이익집단에 주어지는 공적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사적 이익집단에 의한 공적 통치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권력구조의 유연성이 확보될 경우 사회세력간의 자발적 협동을 통해 사회의 변화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組合主義는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와 권력구조의 유연성으로부터 유추되는 사회 제조직의 힘의 균형에 입각한 협동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균형적 협동을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적 힘이 강화되어 사용자와 같이 협상을 하면서도 자체 조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勞組가 자기 규제에 근거한 조합주의적 경영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성급한 재분배보다 장기적 이익확보를 위한 전략을 취할 것

177) R. Mishra, *The Welfare State in Cri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p. 102.

이기 때문이다.¹⁷⁸⁾

조합주의는 경제적 조정이 생산 뿐만 아니라 분배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제체계와 사회체계의 통합, 즉 社會福祉가 분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다시 말해 생산, 소비, 분배, 복지가 서로 접합되는 통합적 사회질서를 의미한다. 예컨대 해리슨(M. L. Harrison)은 조합주의를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3자 협동주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생산집단 뿐만 아니라 消費集團까지 포함시켜 조합주의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¹⁷⁹⁾ 즉 그는 조직화된 소비구조를 통하여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주요부분에 조합주의적 정책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합주의적 정치형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동반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기간에는 성장과 복지간의 조화를 통하여 사회통합 기제로서 작용한다.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 조합주의에 입각한 社會的 同伴者 關係는 이익을 분배하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손해를 흡수·배분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등적 희생은 사회정책의 질적 관리로 적절히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위기의 재

178) Alan Cawson, "Pluralism, Corporatism and the Role of the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16, no. 1 (1978), pp. 194~195.

179) M. L. Harrison, eds., *Corporatism and the Welfare State*, p. 26.

편과정에서 등장한 조합주의는 新보수주의나 마르크스주의 관점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제3의 선택」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조합주의는 탈의회주의 경향을 지닌다. 의회주의는 지역대표에 의한 의회구성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産業社會의 분화되고 전문화된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반면, 조합주의는 의회주의에 근거하되 시민사회 내부의 이익단체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발적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면서 임금, 물가 문제 등 정치·경제적 주요현안에 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政策決定에의 參與를 통해 민주주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⁸⁰⁾

따라서 조합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상호 결합시키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접근방식을 거부한다. 엘리트 이론은 효율성과 전문기술적 정책을 만드는 데 노정되는 유권자들의 무능력에 집중되는데,¹⁸¹⁾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단지 경쟁하는 엘리트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 속에는 市民의 政治的 行爲

180) 조합주의 비판론자들은 조합주의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는 사회 집단의 거대한 권력을 정당화하였으며,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추구를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만 타우워 샤프젠트,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pp. 86~87.

181) Jack L. Walker, "A Critique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 (June 1966), p. 286.

를 엘리트 사이의 경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로 정치지도자들의 선택과 행동을 견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병폐인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하의 민주주의 결함을 해결하려는 것이 조합주의의 문제의식이다.

신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이익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신조합주의는 국가의 역할 평가에 있어서 다원주의와는 다른 일면이 있다. 다원주의적 국가관은 국가가 이익집단들로부터의 압력을 받는 활력없는 수용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국가관은 국가가 다두제하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신다원주의는 국가를 시민사회의 단순한 반영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이익들간의 갈등 속에서 이익집단간의 타협적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국가개념에서는 갈등적인 이익들간의 상호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능동적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다원론적 관점에서는 국가를 고유한 목적을 지닌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들은 모두 국가에 대한 동등한 교섭능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분석방법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구조적 본질을 분석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다원주의에서는 “시장체제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권력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자본의 구조적 힘에 의해 자본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힘들다.”¹⁸²⁾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이 완전경쟁시장을 설정하는 것처럼 이익집단은 구조적으로 지배적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대전제에 입각하고 있는 다원주의의 이론들은 이익집단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달(Robert A. Dahl)이나 찰스 린드블롬(Charles Lindblom)과 같은 다원주의자들은 이익집단간의 대정부 교섭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초기이론을 크게 수정하였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조직력이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자유를 증진하는 것보다 저해하는 방향으로, 공적 행위를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대기업의 영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¹⁸³⁾

다원주의가 국가의 공적 영역과 시민사회의 사적 집단들과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지만 신조합주의는 두 영역의 상호침투

182) 신정현, 「정치학」(서울: 법문사, 1993), p. 197.

183) Robert A. Dahl,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2), p. 40ff.

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신조합주의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결정은 국가기관들과 조직화된 이익집단들간의 제휴적 협조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선진유럽국가의 경우 사회·경제적 갈등 상황에 관여된 여러 사회집단들이 사회적 동반의식을 갖고 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타협적 제휴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조합주의는 “다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적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며 원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⁸⁴⁾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이념적 모델로서 개인주의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미국사회보다는 신조합주의적 서유럽사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¹⁸⁵⁾ 이는 한국이 “미국사회와 같이 엄청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까지 지배를 확대하는 무한경쟁적이고 개방적인 시장체제와 그것이 가져오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¹⁸⁶⁾ 없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자유주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물질적 풍요 위에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물질

184) 신정현, 「정치학」, p. 205.

185) 최장집,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개혁,” 최장집·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서울: 나남, 1993), p. 44~46 참조.

186) 앞의 책, p. 45.

적 풍요가 결핍되어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식 다원주의적 자유주의는 실현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강력한 국가의 전통을 보다 완화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신조합주의와 보다 보편적인 시민권의 원리가 결합한 유럽형적 공동체모델이 더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결사체모델에 입각한 民主的 組合主義가 계급타협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과 공동체간의 균형을 형성시키는 탈개인주의적 인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신조합주의 등장을 위한 정치·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신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中央集中性 原理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정부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부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분권적인 기업별 노조주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자본·노동간의 사이에 3각 동반자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사적 이익집단의 公的 統治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조합주의를 수용하여 체제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요소, 경제적 불평등, 계급·지역간 갈등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組合主義的 形態로 조직화할 경우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의 체제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북

한에 대한 체제의 절대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체제의 우열관계는 북한주민의 정체성을 남한사회 지향적으로 형성시킴으로써 통일의 외적 요인이 변화될 경우, 통일과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經濟統合過程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 조합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이익을 분배하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손해를 흡수·배분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주의적 조직원리는 통일후 체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의 최소화를 통해 國民統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조합주의적 원리의 적용을 통해 통일후유증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력을 제고시킬 경우 통일한국은 통합과정상의 문제점을 국가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민주주의체제를 견고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體制理念의 대외적 성격: 열린 민족주의

가. 民族主義와 국제주의와의 관계

서양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의 원초적 자료와 결합하여 민족(Nation)의 형성과 더불어 민족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다. 民族國家는 국가간 체계를 이루는 세계체제를 구성하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정

치적 단위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현 시대는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統一民族國家의 형성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견해로 비판받을 수 있다. 생산 및 유통의 국제화, 경제적 블록화, 국제기구의 활발한 활동, 정보·통신의 발달,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는 환경운동, 평화운동 및 인권운동 등은 민족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하나의 單位體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현상은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영토적 확대임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간 상호 연관성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⁷⁾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世界 單一共同體의 개념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활동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론 역시 국제관계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단위를 민족국가로 파악하지 않고 세계체제의 기능적 부속물로 간주한다.¹⁸⁸⁾ 더욱이 헌팅

187) Anthony McGrew, "A Global Society?" in S. Hall, D. Held and A. Mc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2), pp. 63~64;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 64 참조.

188) 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35 참조; 월러스타인에 따르면

톤(S. Huntington)은 脫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갈등보다는 문명 및 문화간의 충돌이 민족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⁸⁹⁾ 윌러스타인이 민족국가 및 민족사회 내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한계를 직시하고 분석대상을 世界體制로 넓혔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생산 및 유통의 국제화, 경제적 블럭화, 국제기구의 활발한 활동, 정보·통신의 발달,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는 환경운동, 평화운동 및 인권운동 등에 의한 세계화 현상은 종래의 민족국가의 행위영역을 협애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世界化論이 경제, 환경, 인구, 식량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문제들도 범세계적인 문제로 설정하면서 국가중심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세계국가를 전제로 하는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의 방향선택이다.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영역 변화에 의한 시·공간 압축의 결과이며, 이러한 시·공간의 압축은 경제·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民族國家의 位相을 도외시하고 있지만, 민족국가는 여전히

16세기 유럽에서 근대적 세계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근대적 세계체제가 형성되었는 바, 근대적 세계체제는 정치와 경제가 일치하는 세계제국과는 달리 유통과정으로 결합된 세계경제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J. Blascake, ed., *Perspektiv en des Weltsystems, Materialien zu Immanuel Wallerstein*, >>Das moderne Weltsystem<< (Frankfurt /M, 1983) 참조.

189)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 (3) (Summer, 1993), pp. 22~49.

히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에 조응하면서 민족국가를 대신하는 세계국가가 조만간에 출현한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화보다는 國際化, 즉 경제, 제도, 문화, 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토대로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다국 공통적 활동과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국제화의 개념이 현 국제사회의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다.¹⁹⁰⁾

國際化 時代에는 개별 민족국가들의 주권과 세계체제의 실천적 구조들 사이에 세계경제, 국제조직들, 지역적·지구적 기관들, 국제법 및 군사동맹 등 일련의 외부적 분절이 존재한다.¹⁹¹⁾ 또한 경제의 국제화 경향으로 인하여 민족국가가 경제를 계획·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하고, 世界經濟에 적응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주권국가의 사상과 민족경제의 국제화 사이에는 분절이 발생하고 있다.

민족국가의 주권 일부가 이양되어 초국가적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국제기구와 조직은 새로운 형식의 複合國家的 政治構造를 형성함으로써 주권국가와 국제적 의사결정기구 사

190) 이흥구, “국제화의 도전과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pp. 9~10.

191) 민족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부적 분절로는 정당, 관료조직, 기업 및 기타 조합주의적 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에는 주목할만한 긴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개별 민족국가의 주권은 분할 불가능하고 배타적이며 영속적인 공권력으로 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국제법의 발전은 민족국가를 새로운 법률체계에 복속시키는 등 民族國家의 주권행사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가를 독립적인 행위자로 보는 민족국가론과 민족국가의 주권이 강대국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헤게모니적 국가체제 사이에는 보다 깊은 분절이 놓여 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전후 많은 국가들의 의사결정을 제한 하였던 사례가 보여주듯이 헤게모니적 국제체제에 대한 개별 民族國家의 力量은 그 나라의 자율성에 따라 제약된다. 국제 분업상 한 민족국가의 위상, 헤게모니적 국제질서에서의 위치, 주요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 상이한 국제적 조건에 따라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에 지니는 자율성의 정도는 다양하게 각인된다. 예컨대 모든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동일하게 통합된 것은 아니며, 世界社會를 조형하는 능력도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국제질서는 주권국가체제의 지속과 다원적인 권위구조들의 발전에 의해 특징지워지기 때문에 국제화 과정이 국가체제의 전면적 쇠퇴나 통합된 세계사회의 단순한 대두를 대변하는 것으로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超國家的 連繫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민족국가, 영토적 중립의 중요성 및 주권을 수립·회복·유지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은 결

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므로 민족국가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국가의 종언을 알리는 사람들은 모두 地球村化의 압력 앞에 국가권력이 침식되는 측면을 과장하고 있으나, 민족국가가 국내·국제정치의 방향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제화 및 세계화와 관련,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그 만큼 세계화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진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현단계에서 現實主義에 입각한 경쟁에의 적응노력을 의미하는 국제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한다.¹⁹²⁾ 즉 우리 입장과 이익을 근간으로 세계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전히 인간 개개인의 삶은 일차적으로 민족국가에 의해 규정받는다는 점에서 민족국가의 이념인 民族主義는 민족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일차적인 정치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겠다.

민족주의를 민족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념체계로 이해한다면, 국제주의는 민족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반영하는 이념체계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상호 대립되는 동시에 상호 결합되어 있는 二重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란 대내적으로 동질성과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차별성과 분리주의를 추구한다. 반면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민

192) 김박수·김정수, 「우리경제의 국제화」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1994), pp. 26~27 참조.

족사회간의 이질성 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주의 역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찍이 달성한 영국 및 프랑스에서의 民族主義는 대내적으로 봉건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국가민족」 형성을 추구하였다. 동시에 영국 및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토대로 근대적 민족형성을 이루지 못한 기타 국가들에게 國際主義的 機能을 행사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국 및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체제상의 차이와 발전 격차로 인해 다른 민족에 대해 차별성과 분리주의를 지향하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전양식으로 인식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미발전된 민족들은 발전상의 격차를 극복하고 근대적 민족국가가를 형성하기 위해 언어, 지역, 역사 등으로 구성되는 종래의 「문화민족」을 기반으로 강한 排他的 民族主義를 추구할 수 있다. 즉 미발전된 민족의 민족주의는 근대적 민족국가 제도상의 동질성이 국제적으로 확보된 「국가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언어, 혈통 등이 중심이 되는 「문화민족」의 차원에서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의 근원을 찾는다. 이에 비해 발전된 민족의 민족주의는 자체의 전통주의에 입각한 「문화민족」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우월한 「국가민족」을 토대로 國際主義를 주창한다. 따라서 발전된 민족의 민족주의는 보편성을 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력이 강한 국제주의

로 기능을 하게 되는 반면, 미발전된 민족의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한 민족주의가 되기 쉽다.

그러나 미발전된 민족의 민족주의의 배타성 정도는 國際秩序의 성격에 따라서 판이하게 나타난다. 즉 국제질서가 미발전된 민족의 발전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들 국가의 민족주의는 강한 배타성을 지니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 기능만을 행사할 것이다. 반면 세계질서가 미발전된 민족의 발전을 억압하고 주변부화시키는 경우, 이들의 민족주의는 「전통주의」에 입각한 강한 排他性과 閉鎖性을 지닐 것이다. 국제주의의 이러한 상반된 성격이 세계체제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적 국제체제 팍스 브리타니카는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체되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헤게모니 국가 미국은 자본축적의 중심을 해외시장보다는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포오드주의의 自己中心的 蓄積樣式을 통하여 해외시장의존적인 축적양식에 의거함으로써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초래하였던 팍스 브리타니카의 제국주의적 모순을 지양하였다. 팍스 브리타니카의 패자 영국의 경우 산업생산물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지향적 축적양식을 가졌으나, 미국의 포오드 산업자본주의는 GNP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8%에 불과한 자기중심적 축적양식을 가졌다. 따라서 미국은 응집력있는 내

수시장을 토대로 資本主義 世界體制의 주변부를 (반)식민지 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탈하지 않고, 주변부국가가 외부로부터 자본주의를 이식받는 세계시장 통합적인 발전전략을 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세계체제하에서 내적 발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발전전략을 취했던 발전도상국들은 발전전략의 성공 여하에 따라 자본주의 발전이 눈부신 신흥공업국과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低發展國家群으로 분화되었다.

전후 형성된 팍스 아메리카나의 헤게모니체제는 헤게모니국가와 그외의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에도 상당 정도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팍스 브리타니카체제하에서 영국의 제국주의자본과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민족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헤게모니체제에서는 사라졌다. 미국은 사회주의블럭에 대항하는 資本主義 世界體制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방적 경제정책 및 경제원조를 함으로써 서유럽과 일본을 급속하게 자본주의화시키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패전한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경제통제를 해제하고, 대유럽 및 일본 원조를 단행하는 한편, 군비확충을 지원하는 등 자신의 잠재적 경쟁국들을 유린하지 않고 적극 지원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世界體制에서는 팍스 브리타니카의 헤게모니체제와는 달리 자본축적양식이 특수하게 조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와의 대결상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세계체제 결속력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제주의는

民族國家間의 대결이 심화되지 않은 형태로 형성되었다. 즉
 팩스 아메리카나 세계체제에서 한국과 같이 미발전된 민족은
 「문화민족」을 기반으로 방어적 민족주의에 입각, 세계사회의
 부정적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세계시장지향적 후발산업화를 성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도모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민족주의로 출발한 포오드주의
 적 국제주의는 개별 민족국가의 민족주의를 상당 부분 포용함
 으로써 동양의 기능을 갖춘 普遍主義的 理念體系라고 할 수
 있다.

나. 열린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팩스 아메리카나 세계체제에서 언어, 혈통, 지역, 역사 등의
 동질성에 입각한 「문화민족」을 기반으로 미발전된 체제상의
 열위를 방어하면서 보편주의적 가치가 구현되어 있는 포오드
 주의적 체제를 發展樣式으로 추구해 왔다.

서구사회에서 시민계급은 국가형성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봉건제에 대항함으로써 자신의 계
 급이익을 민족이익으로 일반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타민족과
 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중을 동원하는 민족주의 이념
 을 국가이념으로 만들었다. 반면 한국에서 근대적 국가형성은
 사회적 계급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에 의해
 「위」와 「외부」로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民族主義는 국가이

념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⁹³⁾ 즉 한국에서는 봉건제 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계급이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목표하에서 노동자 및 농민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민족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산업화과정이 민족부르주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國際資本과 연합한 내부 부르주아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¹⁹⁴⁾ 남북대립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보장받았기 때문에 타민족을 배척하는 강한 민족주의는 한국에서 국가이념으로 대두될 수 없었다.

한국에서 국가형성은 「문화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내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외적 차별성을 부각시켰으나, 전통주의로의 회귀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民族主義는 배태하고 있지 않다. 세계시장지향적 후발산업화의 결과로서 서구화가 사회·경제적

193) 한국에서 강한 민족주의 이념은 오히려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일부 재야 운동권에서 발생되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재야운동권은 한국에서 민주화는 물론 민족통일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제국주의와 연계된 지배구조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제국주의적 종속관계로부터 탈피하면서 계급관계를 철폐하는 민중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들이 제시한 민족주의적 이념체계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민중민주주의와 대외적 배타성이 짙은 민족주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산업화에 따른 (신)중간층의 성장,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한 민주화 및 정치·경제·사회개혁 등으로 인해 급진적 변혁운동의 활동공간은 극도로 협소해져 저항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재야운동권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194) 그러나 1930년대의 남미에서는 민족부르주아지가 정치적 과두체제를 배제하고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및 농민과의 연합을 통해 민족주의가 포퓰리즘(populism)의 형태로 국가이념화되었다.

발전을 수반하지 않고 그 과실이 단지 지배집단에 귀속되어지고 일반대중들의 사회적 빈곤화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 대중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미명하에 서구의 발전양식 대신 전통문화로의 복귀를 기치로 내걸고 전통적 가치 및 사회체계를 발전양식의 전형으로 삼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두될 수 있다. 전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排他的 民族主義는 정치와 전통의 결합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범이슬람운동이다.¹⁹⁵⁾ 이 운동은 문화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주변부화된 사회에서 전통주의에 의거하여 새로운 민족적 동질성을 창출, 민족사회와 세계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⁹⁶⁾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계시장지

195) 범이슬람운동은 서구중심의 문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서구화는 동시에 지방화(localization)을 수반하는 바, 이는 문화의 지구화가 동질화와 분화를 수반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콕스(R. Cox)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시장유평피아를 향한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경향이 제1단계로 나타난다. 2단계에서는 서구화에 의해 해체된 사회의 자기방어적 대응이 나타난다. 경제의 세계화는 문화적 동질화를 수반하지만 이러한 동질화경향은 각종 정채그룹과 문화적 전통들에 의하여 저지된다. R. Cox, "Toward A Post-Hegemonic Conceptualization of World Order," in J. Rosenau & E. Czempiel, 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2), pp. 144~46 참조.

196) 그러나 이 운동 역시 전통문화의 권위주의적 특성때문에 단지 특정집단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 티비(B. Tibi)는 이러한 범이슬람운동의 부정적 성격을 직시하고 모든 서구화가 문화제국주의는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서구문화의 계몽적이고 민주적 전통은 미래 세계문화가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세계사회의 문화·이데올

향적인 後發産業化는 사회·경제발전을 수반하여 전통주의에 기반을 둔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두를 기본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세계사회와의 교류에 따라 서구의 민주주의,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이념의 확산을 가져와 한국의 민족형성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보편주의에 대해 「열려 있는 민족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民主主義體制를 이룩할 경우, 한국의 민족주의는 「문화민족」적 측면보다는 보편성이 구현되어 있는 「국가민족」적 측면이 훨씬 보장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자본주의 세계사회는 물론 사회주의 세계사회와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민족주의는 보편성이 결핍되고 전래의 「문화민족」적 요소가 보다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체형 사회주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근대적 민족형성을 하지 못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약소국들은 선진국들의 帝國主義的 民族主義에 대항하여 내적으로는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저항적·방어적 민족주의를 이념체계로서 갖추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¹⁹⁷⁾ 레닌(V. I. Lenin)

로기적 차원은 주변부사회에 일면으로는 긍정적이고 다른 면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 Tibi, *Nationalismus in der Dritten Welt am arabischen Beispiel* (Frankfurt /M., 1971), p. 48.

197) 북한이 민족해방의 차원에서 친일파 척결과 더불어 반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남한보다는 민족문제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한국국가의 대외적 자율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된다.

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이반되지 않고 오히려 社會主義革命을 촉진시킬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여 해방 후 북한에서 형성된 근대적 민족국가는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체사상이라는 특수성에 입각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北韓 社會主義는 20세기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저항적·방어적 민족주의와 같이¹⁹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헤게모니가 반영되어 있는 세계사회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 북한 민족주의는 배타성이 강한 「閉鎖的 民族主義」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와의 관계에서 통일조국 이념은 국제주의 지향적인 민족주의, 즉 「열린 민족주의」를 기본좌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통일한국의 이념적 좌표로서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어 있는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한국의 國際主義的 指向性은 이미 형성된 국제주의에서가

198) 고전적 사회주의 민족이론은 민족(Nation)이란 부르조아지가 자신의 계급이익을 일반이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르조아지가 민족을 도구화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민족은 부르조아지가 자신의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허구적 공동체이며, 민족주의는 부르조아지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사회성원을 동원하여 타민족과의 대립을 촉발시키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이익 관철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상충되는 이념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민족이론을 추종하고 있는 북한은 스스로에게 민족 및 민족주의 개념 적용을 거부하고 있으나, 북한의 민족형성 과정 및 대외관계는 민족 및 민족주의 일반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아니라 남북한간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문화 민족」은 물론 「국가민족」의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가 매개되어 있지 않는 국제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국제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주의가 구현되어 있는 세계체제는 민족주의 산실인 民族國家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란 미완의 민족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지만 민족국가의 체제이념은 국제주의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한국이 통일조국의 이념으로서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적 특수성이 감소하는 반면, 인류의 보편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國際主義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회의 보편성이 감소하고 민족사회의 특수성이 증가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사회의 보편성을 발전시키는 국제주의적 민족주의가 한국이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體制理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열린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세계체제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국제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팩스 아메리카나 세계체제는 민족적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상실해 가고 있다. 즉 선진자본주의의 포오드주의적 축적양식은 1970년 중반부터 발전위기에 봉착

하였고, 미국의 헤게모니하에 재편성된 資本主義 世界秩序 역시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구조 변화를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팍스 아메리카나체제는 미국의 발전된 생산력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어 다른 국가의 생산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자본주의국가간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세계경제를 정치·경제적으로 주도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은 資本主義 世界體制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이를 위한 경제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과 경제적 주도능력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대두되었다.

경제력과 경제적 주도능력간의 괴리가 빚어내는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는 역동성이 극도로 약화된 生産力 發展에 기인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장기불황에 진입한 각 민족국가들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정치·경제적 블록화와 보호주의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를 국제적 무한경쟁으로 해석하고 이 시기의 전략으로 공격적인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신중상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無限競爭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우리 민족이며 경쟁 낙오자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배제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국가와의 분쟁과 더불어 세계경제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더욱이 미국 헤게모니 위기는 국제질서의 다원화 현상으로 집약되

고 있는데, 이것은 포오드주의라는 미국의 발전양식이 발전 위기에 처하고 새로운 發展形態를 모색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는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이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구소련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이행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동서냉전구조는 해체되고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응집력은 점차 약화되어 미국의 政治·軍事的 役割도 자국의 경제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독일의 통일, 막강한 경제력을 소지한 일본의 등장,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체제를 정립하여 세계시장 참여적 발전전략을 구사하는 중국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양극체제는 물론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一極體制가 아니라 최상위에 미국이 존재하면서 역내의 국가를 휘하에 두는 지역적 패자가 등장하는 구조로 구성될 것이다.

新국제질서는 냉전시대와 같은 강대국간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국가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초로 하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소련의 붕괴에 따라 동구권 내부의 민족 갈등이 대두되는 한편,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전가하기 위한 국제적 갈등상황이 보호무역주의, 블럭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舊사회주의권이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자

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산과 「유럽연합」(EU),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등의 地域經濟共同體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국제질서에서는 구질서의 구조와 작동원리들이 잔존하면서 미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 EU 등 보다 다차원적이고 우월한 힘을 가지고 신국제질서를 지도하는 「단극구조하의 다극화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國際主義的 世界秩序가 파괴되어 가고 민족주의적 경향이 지역주의적 블럭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세계사회는 과거의 국제주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국제주의적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韓國의 주변4강 수교 완료,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 등으로 양자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으며 지역 데탕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 하고 있으며, 日本은 자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군사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역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의 상호 적대감과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二重性이 동북아지역 신국제질서의 전

반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중의 域內 影響力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형성됨으로써 동북아질서도 「단극구조하의 다극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1 + 3」체제 형성과 함께 역내국가들이 多者間 協力を 강화하여 역내 정치·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4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民族共存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해 점진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주변환경의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 4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統一理念으로서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족국가간의 갈등을 창조적으로 소화·극복하고 민족국가간의 이해관계를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형성된 國際主義는 파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열린 민족주의」는 기존의 국제주의만을 고수하는 틀을 범하지 말고 태동중인 신국제주의 형성에 일조를 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는 한편, 한국적 특수성을 보편주의로 승화시키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민족적 특수성만 반영된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상실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 특성만을 지니기 때문이다.

第 V 章 結 論

남북통일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으로 민족주의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서양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탄생된 민족국가는 국가간 체계를 이루는 세계체제를 구성하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政治的 單位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현 시대는 국제화 경향에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사회·경제적 공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統一民族國家의 形成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상호 의존성과 지역통합 및 국제화의 추세에 비추어 민족주의의 대외적 성격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서는 안되고 국제협력 및 세계평화와외의 보완관계에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통일이념으로서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民族國家間의 葛藤을 창조적으로 소화·극복하고 민족국가간의 이해관계를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국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체제이념적 성격은 민족성원의 자유, 평등 및 복지가 결합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긴장·대립관계

에 있는데, 이는 자유가 부여된 개인간의 경쟁이 社會的 不平 等を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일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주의적 평등은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없는 평 등, 또는 노예의 평등으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체제에서는 이념이 자유·평등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¹⁹⁴⁾

자유가 규제받지 않는 無制限的 意味의 개인적 자유를 뜻 한다면, 이 자유로 인한 불평등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유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등 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의 차 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즉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평등 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특히 經濟的 自由가 공동체의 식을 파괴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이 될 정도로 불평 등을 극화시켜서는 안되며, 경제적 평등에 대한 배려가 지나 쳐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공동 체 발전의 효율성을 저해해서도 안된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부의 축 적과 행복의 추구가 공동체의 선과 조화될 수 있도록 共同體 意識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자유에

194) 임효선, “분단국 이념통합의 과제,” 「현대국제정치론」, p. 558; 임효선 교수는 자유는 개인적 성격의 것이고 평등은 사회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고, 이 두 개념을 타협불가능한 절대적 성격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말고 상호 관계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두 개념의 상호 보완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중한 나머지 평등의 기본가치를 폄하하여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서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절차상의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비)물질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民族共同體成員들의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조건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이며, 충분조건은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 확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없다면 사회성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은 절대적으로 향상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 배제된 분배구조는 전체 국민들의 福祉水準을 향상시키는 대신 특정계층의 이익에 종사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형평성이 보장된 분배구조가 통일한국을 구성하는 요체가 된다.¹⁹⁵⁾ 그러므로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이념적 기본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상호 보완적 관계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의 自由와 社會的 平等을 지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복지를 상호 결합시키는 곳에

195)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복지 확충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과는 달리 「생산력 발전의 위기」에 의한 경제성장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생산력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한 사회국가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효율성과 사회정의 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정되어야 한다.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가치가 구현된 체제이념으로 통일한국은 정치적 민주주의로서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아울러 법치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自由民主主義를 지향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 법률만능주의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 평등 및 복지를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法治主義는 자유, 평등 및 복지 등의 이념을 국가의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구현시키는 구조적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제도가 법치주의의 제도적 내용이 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사회에서 국가는 사회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제권리를 제한하는 措置國家, 또는 非法治國家의 형태가 지배적이다.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빈곤 등을 제거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적 민주주의도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新보수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는 바, 이는 신자유주의가 단지 경제성장만 집착하여 사회통합의 여건 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형태는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개입이 아니라 사회성원간의 自律的 調整에 의거해야 한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관

계가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라 사회의 자율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듯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열악한 분배구조를 수반, 사회성원간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權威主義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등장하였는 바,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깊숙히 개입하는 「확대된 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 국가는 단순히 사유재산권 보호, 치안 유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외적 방어 등의 자유주의적 국가기능만을 행사하지 않고 자본축적 측면에서의 경제정책은 물론, 진일보한 사회정책을 통하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역사적 타협」을 도출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社會的 民主主義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모델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대중의 (비)물질적 욕구가 개혁지향적 기술관료에 의하여 국가차원에서 충족되고 있는 한편, 자본축적에도 국가의 경제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모델은 「國家中心的 改革主義」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이념형태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중심적 개혁주의」가 아니라 사회성원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기능하는 「사회중심적 개혁주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중심적 개혁주의」에는 관료주의적 폐단

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중심적 개혁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市民社會의 民主化가 수행되어야 한다. 의회, 관료제 및 정당을 보다 더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를 민주화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타협, 여성운동, 생태계 보호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二重的 民主化를 통한 시민적 참여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의와 참여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여적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통일 이후 발생할 남북한간의 지역갈등은 현재의 지역갈등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와 市民社會의 民主化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자유와 평등을 극대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합형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바, 이 가운데 결사체모형으로서 조합주의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결합시키는 통일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이념체계로서 제시된다. 市場모형이 개인이 최대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모형이라면, 결사체모형은 시장적 경쟁을 축으로 하면서도 시장관계를 대립관계가 아닌 자발적 협력관계로 대치함으로써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자

유주의와 전체를 축으로 하는 국가주의와의 대립관계를 相互依存關係로 만드는 조직원리이다. 즉 결사체모형은 자발적 협조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로서 개인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간의 모순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념체계이다. 따라서 결사체모형이 구현된 조합주의적 정치형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표현되는 社會的 同伴關係를 의미하는 바, 경제성장 기간에는 성장과 복지간의 조화를 통하여 사회통합 기제로서 작용한다. 또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조합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이익을 분배하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손해를 흡수·배분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 이후의 체제이념인 자유, 평등, 복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政治·社會的 民主主義가 구현되는 체제형태를 갖출 때 남한체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체제의 절대우위를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합의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組合主義는 이익을 분배하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손해를 흡수·배분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일후의 체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조합주의적 원리의 적용에 의해 사회통합이 제고될 경우 통일

한국은 통합과정상의 문제점을 국가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民主主義體制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강정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8.
-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2」. 서울: 한울, 1994.
-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1993.
-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김성철. 「북한관료부패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1984.
- 노명식. 「자유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3.
-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서울: 청람, 1991.
- 보건사회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보건의료·사회보장부문 계획」. 서울: 보건사회부, 1992.
- 보비오, 노르베르트.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 북한사회과학출판사 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서울: 백산, 1989.

- 북한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샤르젠티, 라이만 타우워.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서울: 한울, 1994.
- 사르토리, 지오바니.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II」. 서울: 인간사랑, 1990.
- 신인철. 「북한주체철학연구」. 서울: 나남, 1993.
- 아이힐러, W. 이태영 역.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100년」. 서울: 중앙교육문화, 1989.
-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 統一院. 「北韓概要 '91」. 서울: 統一院, 1990.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0.
- 헬드, 데이비드. 이정식 옮김. 「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인간사랑, 1988.
-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서울: 유풍출판사, 1993.
-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1991.
- Altvater, E. / Kallscheuer, ed. *Den Staat Diskutieren*. Berlin, 1979.
- Barber, Benjamin.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Press, 1984.
- Bay, Christian. *The Structure of Freedo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 Becker, Lawrence C. *Property Rights: Philosophic Foundation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 Berlin, Isaiah.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Blascheke, J. ed. *Perspektiven des Weltsystems*. Materialien zu Immanuel Wallerstein. >>Das moderne Weltsystem<<. Frankfurt /M, 1983.
- Bobbio, Norberto. *Die Zukunft der Demokratie*. Berlin: Rotbuch Verlag, 1988.
- Buci-Glucksmann, Chr. and Therborn, G. *Der sozialdemokratische Staat*. Hamburg: VSA, 1982.
- Burke, Edmund. *The Works of the Right. Honorable Edmund Burke. rev. ed.* Boston: Little, Brown, 1865.
-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Harrison, M. L. ed. *Corporatism and the Welfare State*. England: Gower, 1984.

- Hwang, Byung-Duck. *Nachholende Industrialisierung und autoritärer Staat. Das Beispiel Südkorea: Politik, Ideologie und weltmarktorientierter Kapitalismus*. Berlin: Edition Sigma, 1989.
-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 . *The Road to Serfdo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 Hirschman, Albert O.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Hübner, K. *Theorie der Regulation*. Berlin, 1989.
- Klaus, Georg and Buhr, Manfred. eds. *Philosophisches Wörterbuch*. Berlin: das europäische Buch Verlag, 1974.
- Klein, Philip. *From Philanthropy to Social Welfare*. San Francisco: Jossey-Bass, 1968.
- Laclau, E. and Mouffe, C.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Schocken Books, 1985.
- Lebeaux, C. N. and Wilensky, H. L.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Free Press, 1965.
- Lemberg, Eugen. *Ideologie und Gesellschaft*. Stuttgart, 1974.

- Lenk, K. *Deutscher Konservatismus*. Frankfurt /M: Campus, 1989.
- Malloy, James M. ed. *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7.
- Marshall, T. H. *Social Policy*.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Press. 1965.
- Macpherson, C. B.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Clarendon Press, 1962.
- Mármora, L. *Nation und Internationalismus. Probleme und Perspektiven eines sozialistischen Nationbegriffs*. Bremen, 1983.
- Marx, K. / Engels, F. *MEW 1*. Berlin, 1977.
 _____ . *NEW 13*. Berlin, 1977.
- Meincke, F. *Weltb rge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1969.
- Meyer, Th. ed. *Demokratischer Sozialismus. Geistige Grundlagen und Wegen in die Zukunft*. München: Günter Olzog Verlag, 1980.
- Marx, K. / Engels, F. *MEW 13*. Berlin, 1977.
- Mill, John Stuart. *Utilitarianism. Liberty, Representative Democracy*. London: Dent, 1962.

- Mishra, R. *The Welfare State in Cri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 Narr, Wolf-Dieter and Offe, Klaus. eds. *Wohlfahrtsstaat und Massenloyalität*. Köln: Verlag Kiepenheuer & Witsch, 1975.
-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Basil Blackwell, 1974.
- O'Connor, J.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3.
- Pateman, Carole.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A Critique of Liber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1985.
- Poulantzas, N. *Staatstheorie: Politischer Aufbau, Ideologie, Sozialistische Demokratie*. Hamburg: VSA, 1978.
- Projekt Klassenanalyse. *Leninismus: neue Stufe des wissenschaftlichen Sozialismus?* Hamburg: VSA, 1972.
- Rabehl, B. *Marx und Lenin*. Berlin: Verlag für das Studium der Arbeiterbewegung GmbH, 1973.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Schlecht, Otto.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er Sozialen*

- Marktwirtschaft*. Tübingen: J. C. B. Mohr, 1990.
- Schmitter, Philippe C. & Lehmbruch, G.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1979.
- Schottland, Charles I. ed. *The Welfare State*. New York: Harper & Row, 1967.
- Schumann, H. G. ed. *Konservatismus*. Köln: Kiepenheuer & Witsch, 1974.
- Seligman, E. R. A.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33.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Modern Library, 1976.
- Streek, Wolfgang & Schmitter, P. C. eds. *Private Interest Government: Beyond Market and State*. London: Sage, 1985.
- Tawney, R. H. *Equality*. London: Allen & Unwin, 1952.
- Tibi, B. *Nationalismus in der Dritten Welt am arabischen Beispiel*. Frankfurt /M.: Suhrkamp, 1971.
- Tismuss, R. M. *Social Polic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8.
- Tocqueville, A. de. *Democracy in America(1833-1840)*.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8.

Wallerstein, I.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Weber, M.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J. C. B. Mohr, 1972.

2. 論 文

김영작. “바람직한 통일조국의 미래상”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단법인 동북아 문화연구원, 미발간논문) 1993.

김박수·김정수. “우리경제의 국제화.”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1994.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론의 현대적 분화: 제3의 길을 향해.” 「현대 민주주의론」. 사회와 사상 (1991년 겨울).

멜루치, 알베르토. “일상생활의 민주화.” 한상진 편저.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1.

박승덕.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김창호 엮음. 「한국사회변혁과 철학논쟁」. 서울: 사회와 사상, 1988.

성경룡.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1993).

슈트라쎌, 요하노.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서울: 청람, 1991.

오정수. 「남북한 사회정책 변천의 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박사학위 논문, 1993).
- 이종석.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흥구. “국제화의 도전과 과제.”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 임효선. “분단국 이념통합의 과제.” 「현대국제정치론」 (윤근식교수 화갑기념논총). 서울: 대왕사, 1991.
- 임혁백.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제.” 한국사회학회·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 진덕규. “한국민족주의의 미래구도: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의 정향.”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 Badia, Gilbert “Rosa Luxemburg und Lenin.” in Claudio Pozzoli, eds. *Rosa Luxemburg oder Die Bestimmung des Sozialismus*. Frankfurt /M.: Suhrkamp 1974.
- Brittan, S. “The economic contradictions of democrac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 (1975).
- Cawson, Alan. “Pluralism, Corporatism and the Role of the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16, no. 1 (1978).
- Cox, R. “Toward A Post-Hegemonic Conceptualization of World Order.” in J. Rosenau & E. Czempiel, ed.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2.
- Grant, Wyn. "Introduction." in Wyn Grant ed.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ism*. London: Macmillan, 1985.
- Hoffmann, J. "Das Ende der Fahnenstange? Sozialdemokratie und Keynesianischer Klassenkompromiß in der BRD." *Prokla heft* 49 (1992).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3): 22-49 (Summer 1993).
- Kirk, Russell. "Prescription, Authority, and Ordered Freedom." Frank S. Meyer ed. *What is Conservatism?*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4.
- McGrew, Anthony "A Global Society?" in S. Hall, D. Held and A. Mc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2.
- Nordhaus, W. D.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1975).
- O'Donnell, G. A. "Corporatism and the Question of the State." in Malloy, James M. ed. *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in Latin America*.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7.
- Schmitter, Philippe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36, no. 1 (Jan 1974).

“Democratic Theory and Neocorporatist Practices.” *Social Research*. vol. 50, no. 4, 1983.

“Neo-Corporatism and the State.” in Wyn Grant. ed.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ism*. London: Macmillan, 1985.

Sigler, Jay A. “Introduction.” *The Conservative Tradition in American Thought*. New York: Capricorn Books, 1969.

Sreek, Wolfgang and Schmitter, Philippe. “Community, Market, State and Association?: The Prospective Contribution of Interest Governance to Social Order.” in Sreek and Schmitter. eds. *Private Interest Government: Beyond Market and the State*. Berverly Hills: Sage, 1985.

Walker, Jack L. “A Critique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 (June 1966).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
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부의 政勢認識: 對南觀·對外觀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北韓 住民의 價値意識 變化研究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
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
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 ~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金正日政權의 變化展望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研究報告書 94-3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